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대군인 정착지원 고도화 방안

정기용 | 주희진

강원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대군인 정착지원 고도화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원
특별자치도

C O N T E N T S

I	서론	
1	연구배경	4
2	연구목적 및 대상	6
II	제대군인 및 지원정책 현황	
1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현황	8
2	제대군인 의미 및 현황	13
3	제대군인 지원정책	18
4	선행연구 검토	35
5	소결	38
III	제대군인 정착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1	조사 설계	41
2	제대(예정)군인 설문조사 결과	44
3	심층인터뷰 결과	51
4	소결	57
IV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고도화 방안	
1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 개요	60
2	추진 전략 1: 일자리 및 경제활동 기반 강화	61
3	추진 전략 2: 주거 안정 및 초기 정착지원	64
4	추진 전략 3: 가족 동반 정주 환경 조성	66
5	추진 전략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조성	68
6	추진 전략 5: 데이터 기반 정책 및 홍보 체계 강화	69
V	결론	
1	연구 요약	71
2	제대군인 정착지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74
	참고문헌	80

I 서론

1. 연구배경

□ 강원 지역 인구·경제 여건 변화와 제대군인의 정책적 중요성

-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 지역 산업의 인력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여건 속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핵심 인적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 강원은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구조적 순유출이 발생하는 반면, 40~60대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확인되어, 강원的人口구조 변화는 ‘청년 유출-중·장년 유입’의 비대칭 구조로 나타남
 - 이러한 여건은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기반과 산업 인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어, 강원的人口·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 인력의 확보와 정착 기반 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됨
-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정책대상으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 유입이나 외국인 등 외부 인구 유입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정주 여건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강원에 안정적 정착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제대군인은 강원 장기 거주 의향이 매우 높고, 접경지역이 다수 분포하는 강원의 지리적·군사적 특성상, 도내 거주 제대군인은 9,309명으로 전체 제대군인의 약 7.2%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보임
 - 또한, 매년 약 600명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큼
- 접경지역과 군부대가 다수 분포한 강원的人口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군(軍)’과 결부된 지역 정체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인구 유입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인구 유입 전략을 넘어 경제활동 기반 확충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큼

- 따라서 제대군인 정책은 기존의 예우와 지원 중심이 아닌, 강원도의 인구감소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종합적 정책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제대군인 지원정책 환경 변화

- 강원도는 매년 중·장기복무 군인의 전역으로 제대군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정주 여건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1년 6,971명에서 2025년 9,309명으로 매년 약 500~600명 내외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강원도는 자연환경과 정주 여건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의료·생활 인프라의 한계로 실제 정착이 제약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기존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전직 준비와 사회복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취업을 넘어 정주 기반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역 전 전직준비를,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전역 후 취업·창업 및 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정책의 중심은 주로 '전직'과 '사회복귀'에 있음
 - 그러나 최근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의 실질적인 정책 수요는 본인의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귀농·귀촌·귀산촌, 배우자의 일자리, 자녀 교육 등 가족 단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족 동반 이주 및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강원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제도적 범위 확대와 지역 맞춤형 통합 정주 정책의 기반을 마련함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개정(2026. 4. 17. 시행)을 통해 지원 대상을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하여 기존의 중·장기 복무자뿐만 아니라, 단기 복무 후 전역하는 일부 제대군인까지 강원도의 인구로 편입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됨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개정(2026. 4. 17. 시행)을 통해 제대군인 본인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확립됨
 - 이는 향후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 역시 가족 동반 정주의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불구하고, 매년 도내로 유입되는 제대군인 규모에 비해 실제 정착지원이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정책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매년 약 600명 규모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신규로 유입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연간 교육 인원은 약 400명 수준이며, 이마저도 취업·창업·귀농귀촌귀산촌 교육 수료자가 자격증 과정에 다시 참여하는 중복 구조로 운영되어 중복을 제외한 순수 지원 인원은 약 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는 매년 유입되는 제대군인의 상당수가 지역 차원의 정착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군인을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편적 전직지원만으로는 지역 정착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동력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특히 강원은 접경지역 복무 경험과 지역 생활권 형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대군인이 많은 만큼, 전국 단위의 획일적 지원을 넘어 일자리, 주거, 가족생활, 지역 적응을 연계한 정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즉, 제대군인과 그 가족을 강원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수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장기 정착을 전인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현행 지원정책과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및 대상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인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대군인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의 고도화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강원의 인구·산업 여건,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현황, 중앙정부 및 강원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자 함

- 또한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제 정착 의향, 정착 저해요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가족 동반 정주 여건과 관련된 현실적 제약도 함께 검토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는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체계 기능 고도화와 정착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대상

- 본 연구의 제도적 연구 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기본 범주로 하되, 2026년 4월에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4년 이상 복무한 제대(예정)군인까지 포함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정책적 대상에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 중인 제대군인이 포함되며, 기존의 중·장기 복무자 중심 제대군인뿐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역하는 일부 단기 복무 제대군인도 제도적 범위에 포함됨
 - 다만,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 정년에 따라 제대군인의 전역은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집중되며,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 역시 58명 중 44명이 50대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4년 이상 복무한 제대(예정)군인을 폭넓게 포괄하되, 제대군인의 일반적 전역 연령과 실제 정책 수요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50대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 아울러 강원 정착은 제대군인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생활기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제대군인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되 정책적 검토 범위에서는 가족까지 함께 고려함

II 제대군인 및 지원정책 현황

1.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현황

□ 지리적·행정구역 현황¹⁾

- 강원특별자치도는 한반도 중앙부 동측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로 구분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짐
 - 동쪽은 동해안과 접하고, 서쪽은 수도권과 인접하며, 북부는 휴전선과 맞닿아 있어 접경 지역으로서의 지리적·군사적 특성을 동시에 지님
 - 특히 접경지역과 군부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군 복무 경험을 가진 제대군인과 지역 사회 간 연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조건을 가짐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산악 지역으로, 농·산촌 기반의 정착지원 정책과 연계 가능성이 큼
 - 총 면적은 20,569㎢이며, 이 중 휴전선 이남 지역은 16,875.2㎢로 남한 전체 면적의 16.8%를 차지함
 - 토지 구성은 임야가 13,735.9㎢(8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귀산촌, 산림자원 활용, 산림 치유·관광 등과 연계한 정착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고 있음
- 행정구역은 7개 시와 11개 군 등 총 18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면적과 산악·접경지역 특성으로 인해 지역별 정주 여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춘천·원주·강릉 등 주요 도시는 교육·의료·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접경·산간지역은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 정착지원정책 설계 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introduce/situation/district>)

□ 인구 현황²⁾

-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총인구는 2016년 1,550,806명에서 2025년 1,508,50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266,152명에서 404,489명으로 증가함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6년 17.2%에서 2025년 26.8%로 상승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표 2-1 |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현황

(단위: 세대, 명, %)

연도	세대수	총 인구수	인구 수 증감	65세 이상 고령자 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2016	692,254	1,550,806	-	266,152	17.2%
2017	700,265	1,550,142	-664	279,976	18.1%
2018	707,245	1,543,052	-7,090	289,386	18.8%
2019	719,524	1,541,502	-1,550	302,886	19.6%
2020	736,301	1,542,840	1,338	319,691	20.7%
2021	746,220	1,538,492	-4,348	333,176	21.7%
2022	755,481	1,536,498	-1,994	349,874	22.8%
2023	760,635	1,527,807	-8,691	366,555	24.0%
2024	764,834	1,517,766	-10,041	384,970	25.4%
2025	768,900	1,508,500	-9,266	404,489	26.8%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주민등록인구현황

- 강원 인구이동의 핵심 특징은 20대 청년층의 구조적 순유출과 40~60대 중·장년층의 상대적 순유입으로 요약됨
 - 20~29세 인구는 2016년 이후 매년 지속적인 순유출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이동하는 흐름과 관련됨
 - 반면 40대, 50대, 60대는 전반적으로 순유입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은퇴·전직·귀농귀촌귀산촌 수요가 있는 중·장년층이 강원 인구 유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2)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 표 2-2 |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이동(전입·전출·순이동) 현황

(단위: 명)

연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19세 미만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2016	223,484	221,592	1,892	717	-5,424	776	1,259	2,845	1,628	91
2017	211,653	209,618	2,035	114	-4,448	346	1,040	2,819	1,722	422
2018	216,398	220,252	-3,854	-5	-7,240	-475	334	1,988	1,572	-28
2019	217,626	215,965	1,661	946	-5,651	890	914	2,587	1,902	73
2020	223,354	217,897	5,457	950	-4,829	1,310	1,607	3,085	2,680	654
2021	217,103	210,422	6,681	930	-4,574	1,281	1,829	3,512	3,047	656
2022	194,864	187,370	7,494	669	-2,672	1,325	1,609	2,941	2,996	626
2023	173,366	174,763	-1,397	-1,062	-3,548	-40	198	1,689	1,652	-286
2024	184,339	186,866	-2,527	-710	-3,993	-821	198	1,374	1,390	35
2025	182,825	184,212	-1,387	-744	-3,765	-412	269	1,596	1,857	-188

주: 연령별 자료는 해당 연령에 대한 순이동 수를 의미함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국내인구이동통계

- 인구이동 사유를 살펴보면, 강원은 자연환경과 주거 여건 측면에서는 유입 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업 요인에서는 지속적인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자연환경’ 사유는 2016~2025년 동안 매년 순유입을 기록하여 강원 인구 유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직업’에 의한 순이동은 2023년 -2,619명, 2024년 -4,287명, 2025년 -2,674명으로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인구 유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종합하면, 강원은 주거·자연환경 측면에서는 정착 매력을 갖고 있으나, 일자리 여건의 한계로 인해 인구 유입 효과가 충분히 정착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보임
 - 따라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정책은 단순한 거주 유도나 생활환경 홍보를 넘어, 지역 내 경제활동 기반 마련과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음

| 표 2-3 | 강원특별자치도 이동사유별 이동자 수

(단위: 명)

연도	순 이동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2016	1,892	1,295	-2,196	-1,688	1,782	508	2,749	-558
2017	2,035	832	-1,104	-331	1,514	413	3,263	-2,552
2018	-3,854	-3,133	-2,437	-84	871	294	2,919	-2,284
2019	1,661	-1,726	-78	1,078	917	274	2,851	-1,655
2020	5,457	290	-190	2,980	-194	718	3,628	-1,775
2021	6,681	-287	127	4,503	-173	566	3,847	-1,902
2022	7,494	-252	1,562	3,849	365	235	3,344	-1,609
2023	-1,397	-2,619	-409	1,286	-162	-298	2,568	-1,763
2024	-2,527	-4,287	-857	1,416	410	-271	2,463	-1,401
2025	-1,387	-2,674	-914	1,877	-185	-331	2,498	-1,658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국내인구이동통계□ 산업 현황³⁾

- 2024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64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강원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 푸드테크, 방산, 기후테크 등 7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성장 전략이 실제 지역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고용 기반 확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의 연계가 필요함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는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임
 -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각각 전체 사업체의 21%를 차지하여, 두 업종이 전체의 42%를 구성함
 - 반면 제조업 비중은 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 고용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3)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보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GRDP 역대 최대 64조 6천억 원 달성... 미래산업과 SOC 투자로 100조 시대 가속'. 2025.2.2;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지원 센터 홈페이지(<https://gangwoninvest.gwd.go.kr/gwcia>)

- 이러한 산업구조는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제대군인은 군 복무 과정에서 조직관리, 안전관리, 시설관리, 재난대응, 장비운영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축적하였으나, 지역 내 일자리 구조가 단순 서비스업 중심일 경우 군 경력과 지역 일자리 간 매칭이 쉽지 않음
 - 특히 40~50대 제대군인은 일정 수준의 보수와 직무 안정성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서비스직 중심의 노동시장만으로는 정착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정책은 지역 산업구조의 한계를 고려하여, 군 경력 활용 가능 일자리 발굴과 전략산업·공공서비스·지역기반 경제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재난안전, 시설관리, 교통·장비운영, 산림·관광·생활서비스 등 강원 지역 수요와 제대군인의 경험을 연결하는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요구됨
 - 또한 귀농·귀촌·귀산촌, 로컬 비즈니스,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경제활동과 연계하여 기존 민간 노동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표 2-4 | 강원특별자치도 산업 현황

산업 구분	비중	사업체 수	종사자 수(명)
도매 및 소매업	21%	46,217	90,787
숙박 및 음식점업	21%	44,281	100,603
건설업	12%	25,436	78,28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	8,331	11,996
교육 서비스업	4%	8,396	58,146
부동산업	3%	6,188	14,17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	21,818	35,122
운수 및 창고업	7%	15,565	32,290
제조업	5%	10,161	62,173
기타	13%	27,810	267,640
합계	100%	214,203	751,216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지원 센터 홈페이지(<https://gangwoninvest.gwd.go.kr/gwcia>)

2. 제대군인 의미 및 현황

□ 제대군인 의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제2조에 의하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대한 사람”으로 정의함
 - 제대군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구분이 가능함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의미하며,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의미함(「제대군인법」 제2조 제1항)
 - 즉, 제대군인은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미하나, 법적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복무자로 한정되며, 이는 의무 복무만을 마친 단기 복무자와 달리, 직업 군인으로서 장기간 국가에 헌신하고 사회와 격리된 기간이 길어 별도의 사회 적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임
 - 일반적으로 제대군인과 예비역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대군인은 현역 복무 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예비역은 유사시 현역으로 동원될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을 의미함(정길호 외, 2011)
- 단, 강원특별자치도는 조례를 통해 국가법률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개념과 별도로 4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 중인 제대군인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책대상을 구체화함(「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4조)

□ 제대군인 특성

- 「군인사법」은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년 및 제대군인의 연령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은 계급별로 복무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정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해야 하는 ‘비자발적 조기 퇴직’의 특성을 가짐

- 물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년 이전에도 명예전역 등이 가능하나, 제도적으로 보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제대군인의 주된 연령대는 사회 활동이 왕성해야 할 4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에 집중됨

| 표 2-5 | 제대군인 연령 정년

계급	연령 정년	계급	연령 정년
원수	종신	소령	50세
대장	63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중장	61세	준위	55세
소장	59세	원사	55세
준장	58세	상사	53세
대령	56세	중사	45세
중령	53세	하사	40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군인사법」

- 제대군인은 생애주기상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재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함
 - 통상적인 민간 기업의 정년보다 이른 45~56세 전후에 전역하는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 시기는 자녀 교육, 결혼, 노후 준비 등으로 생애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나, 군 특성상 사회와 단절된 경력으로 인해 민간 재취업 경쟁력이 낮아,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전직 및 정착지원'이 필수적인 세대임
- 「제대군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 받은 교육 및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
- 제대군인은 군(軍) 조직의 특수성 및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인한 사회적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직업군인의 복무 특수성 및 사회 정착 차원의 당위성을 반영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 직업군인은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로 인한 자녀 교육 및 주거 불안정, 생애 최대 지출기(40~50대)에 도래하는 계급 정년(조기 전역) 등 구조적 불안요소를 내재함

- 이와 함께, 엄격한 위계질서와 폐쇄적인 조직 문화, 사회와 격리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전역 후 사회 적응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및 실무 역량 축적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며 감수한 사회적 단절을 보상하고, 원활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임(박혜란, 2009; 박효선, 2022)

□ 전국 제대군인 현황⁴⁾

- 2025년 12월 말 기준 국가보훈부에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여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제대군인은 총 129,147명으로 집계됨
 - 성별 구성은 남성이 124,528명(96.4%)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4,619명(3.6%)으로 나타남
 - 다만, 최근 여군의 간부 임관 확대 추세에 따라 여성 제대군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총 제대군인 중 과거 전역자의 누적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제대군인 중 65세 이상이 39,228명(30.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전역한 인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층으로 편입된 '누적 효과'에 기인함
- 실제 매년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핵심 연령층은 '50대'임
 - 「군인사법」상 계급 정년(원사 55세, 대령 56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사회로 배출되는 신규 제대군인의 주력 계층은 50대로 실제 현황 통계에서도 50~59세 제대군인은 25,639명(19.9%)으로 나타남

4) 출처: 국가보훈부(<https://www.mpva.go.kr>). 보훈대상자 기본 현황

| 표 2-6 | 전국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

구분	명(%)	구분	명(%)
총원	-	-	129,147(100.0%)
남	124,528(96.4%)	여	4,619(3.6%)
29세 미만	6,032(4.7%)	50~54세	11,712(9.1%)
30~34세	14,407(11.2%)	55~59세	13,927(10.8%)
35~39세	11,354(8.8%)	60~64세	14,520(11.2%)
40~44세	8,306(6.4%)	65세 이상	39,228(30.4%)
45~49세	9,661(7.5%)		
서울	17,190(13.3%)	강원	9,309(7.2%)
부산	5,382(4.2%)	충북	4,712(3.6%)
대구	5,146(4.0%)	충남	5,944(4.6%)
인천	7,058(5.5%)	전북	3,469(2.7%)
광주	3,531(2.7%)	전남	3,573(2.8%)
대전	5,460(4.2%)	경북	6,000(4.6%)
울산	1,253(1.0%)	경남	9,025(7.0%)
세종	2,196(1.7%)	제주	1,170(0.9%)
경기	38,700(30.0%)	해외 및 기타	29(0.0%)

출처: 국가보훈부(<https://www.mpva.go.kr/>)

주: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제대군인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은 9,309명으로 전체 제대군인 중 7.2%를 차지함
 - 수도권(경기, 서울)을 제외하면, 강원특별자치도에는 7.2%의 제대군인이 거주하고 있어 비수도권 중 최상위권의 밀집도를 보임
 - 이는 부산(4.2%), 대구(4.0%) 등 대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군인의 ‘제2의 고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함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현황⁵⁾

- 강원특별자치도의 등록 제대군인은 2021년 6,971명에서 이후 매년 약 500~600명 내외의 제대군인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5년 12월 말 기준 9,309명으로 집계됨

5) 출처: 국가보훈부(<https://www.mpva.go.kr/>). 보훈대상자 기본 현황

- 이는 매년 500~600명 규모의 신규 제대군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인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표 2-7 |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

구분	명(%)	구분	명(%)
총원	-	-	9,309(100.0%)
2025년	9,309(587명 증가)	2022년	7,532(561명 증가)
2024년	8,722(604명 증가)	2021년	6,971(-)
2023년	8,118(586명 증가)		
강릉시	865(9.3%)	인제군	331(3.6%)
고성군	191(2.1%)	정선군	70(0.8%)
동해시	678(7.3%)	철원군	412(4.4%)
삼척시	166(1.8%)	춘천시	2,181(23.4%)
속초시	638(6.9%)	태백시	59(0.6%)
양구군	210(2.3%)	평창군	112(1.2%)
양양군	155(1.7%)	홍천군	494(5.3%)
영월군	79(0.8%)	화천군	291(3.1%)
원주시	2,157(23.2%)	횡성군	220(2.4%)
29세 미만	258(3.7%)	50~54세	541(7.8%)
30~34세	596(8.5%)	55~59세	1,274(18.3%)
35~39세	415(6.0%)	60~64세	927(13.3%)
40~44세	397(5.7%)	65세 이상	2,056(29.5%)
45~49세	507(7.3%)	연령 구분 합계	6,971(100.0%)

출처: 국가보훈부(<https://www.mpva.go.kr/>)

주: 1) 2025년 12월 31일 기준

2) 연령별 제대군인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별 제대군인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도시인 춘천·원주·강릉에 전체의 절반 이상(55.9%)이 집중됨
 - 도내 제대군인의 거주지는 춘천시(2,181명, 23.4%), 원주시(2,157명, 23.2%), 강릉시(865명, 9.3%) 순으로 나타나,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3대 도시에 55.9%가 밀집해 있음
 -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도 총 1,435명(15.4%)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철원 412명, 화천 291명, 양구 210명, 인제 331명, 고성 191명으로 나타나 인구 규모 대비 제대군인 비중이 매우 높음

- 2021년 12월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연령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중년층이 전체의 26.1%를 차지함
 - 50~59세 제대군인이 1,815명(26.1%)으로 가장 두터운 허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정년퇴직이 본격화되는 55~59세 구간의 비중(18.3%)이 매우 높아, 이들에 대한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함
 - 65세 이상 고령층이 2,056명(29.5%)으로 가장 많으나, 이는 과거 전역자의 누적 수치이며, 실제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 수요가 가장 왕성한 계층은 50대임

3. 제대군인 지원정책

1) 중앙정부 지원정책

□ 지원정책 추진체계 및 개요⁶⁾

- 중앙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전역 전’과 ‘전역 후’ 단계로 이원화되어 운영됨
 - 중앙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군 복무 중인 전역예정자에게는 ‘전직 준비’를, 사회로 배출된 제대군인에게에는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단계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전역 전) 국방부 지원은 ‘교육·컨설팅·구직등록(준비)’ 중심의 사전 준비체계로 구성됨
 - 전직지원교육의 법적 근거로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등 관련 법령을 명시하고, 사회적응 능력 및 전문지식 배양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함
 - 단계별로 진로교육(전역 2년 전) → 전직기본교육(전역 1년 전) → 전직컨설팅(중·장기)·맞춤형 전문교육(기본교육 수료 후)을 운영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정보 제공·추천 등을 연계함(국방 전직교육원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활용 명시)
 - 국방전직교육원은 취·창업에 희망하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전역 3년 전부터 구직등록(회원등록)을 안내하고, 전직교육 참여 및 취·창업 정보 제공 이용을 위해 구직등록이 필요함을 제시함

6)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VnetIndex.do>)

- (전역 후) 국가보훈부 주관하에 전국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전직지원금 지급, 직업 능력 개발, 취·창업 알선 등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함
 - 국가보훈부는 전국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인력에 의한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제도·프로그램은 전직지원금, 직업능력개발교육비(1인당 한도·자부담 구조),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구성되며(세부요건은 제도별로 상이), 전역자뿐 아니라 전역예정자도 일부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복무 기간에 따라 장기복무와 중기복무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 장기복무자에게는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 확대, 주택 우선 공급, 보훈 의료 지원 등 포괄적인 예우와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중기복무자는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 복귀에 초점을 둠

표 2-8 | 중앙정부 제대군인 지원정책 추진체계 및 개요

구분	국방부	국가보훈부
지원 시기	• 전역 전	• 전역 후
핵심 목표	• 전역 이전 전직 준비·사회 진출 준비 • 전직 역량·경력 설계·진로탐색	• 전역 이후 사회복귀·취·창업 • 사회 정착 및 생활 안정
주관 기관	• 국방전직교육원	• 제대군인지원센터
정책 대상	• 전역 예정 간부(장교·부사관)	• 5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등록자)
정책 특징	• 단계별 교육체계로 '전역 준비' 표준화	• 취업상담, 창업지원, 기업협력 등 기능 분장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VnetIndex.do>)

□ (전역 전) 국방부 제대군인 지원정책(전직지원) 주요 내용⁷⁾

- 국방부는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0조의3,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전역을 앞둔 간부가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함⁸⁾

7)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 국방부(2025). 전역간부 안내서,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2025). 2025년도 전직 교육안내서

- 전직지원교육은 전역예정 간부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직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직지원교육이란 군 경력을 활용하여 전역 이후의 새로운 경력 목표를 탐색 및 수립하는 진로교육과 분야별(취업, 시험, 창업, 귀농) 구직역량 향상을 위한 전직기본교육으로 구성되어 전역예정간부의 인생 2막 준비를 돕기 위한 교육과정임
- 기본 방향은 사회적응 능력 및 전문지식 배양, 목표 분야별 전직역량 향상,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임
- 국방부의 전직지원 대상은 5년 이상 복무한 전역 예정 간부(장교·준부사관)를 포괄함
 - 기본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복무한 전역예정자이나, 전직지원기간(사회 적응 기간) 부여 등 일부 핵심 제도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됨
 -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은 3~5개월,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은 최대 12개월의 전직지원기간이 부여됨
 - 진로교육은 전역 2년 전부터 전직기본교육 입교 전까지, 전직기본교육은 전역 1년 전부터 전역 전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표 2-9 | 국방부 전직지원체계

구분	단계	핵심 내용	비고
전역 2년 전	• 전직준비 지원	• 진로교육(취업·시험·창업·귀농·귀촌 등 진로설정)	
전역 1년 전	• 전직준비	• 전직기본교육(목표 분야별 전직역량 향상)	
전역 후	• 취업지원	• 전직컨설팅(중·장기), 맞춤형 전문교육(기본교육 수료 후), 취업정보 제공/추천	• 국방전직교육원 +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출처: 국방부(2025). 전역간부 안내서, p.60-61 재구성

- 국방부의 전직지원은 2015년에 설립된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전역 후 재취업 목표에 따라 취업, 창업, 귀농·귀촌 등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함
 - 세부적인 전직지원활동으로는 임용 4년 차부터 전역 직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Life-Cycle) 진로 지원’ 시스템, 진로 방향 설정 및 전직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 운영, 취업·창업·귀농·귀촌 등 진로 목표별 특화된 전문 역량 강화 지원, 1:1 전담 상담사 배정 및 찾아가는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이 있음

8) 국방부의 전직지원은 제대군인이 아닌 엄밀한 의미에서 전역예정 간부(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전역예정자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제대군인이라는 큰 정책 틀로 다룸

| 표 2-10 | 국방부 전직지원 주요 내용

구분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 기간 및 과정	• 전직기본교육 (2주)	• 전직지원컨설팅 (6주)	• 심화교육 (7개월)	• 취·창업매진 (2~3개월)	취업지원
	• 변화관리 • 사회적응	• 자기진단 • 목표설정	• 자격증취득 • 전문성 향상 • 직무능력 향상	• 취·창업 매진	미취업자 교육
전직 지원 활동	• 장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 • 중기복무자 취업기본교육 • 전방부대 순회 취업기본교육 • 제대군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자기진단/ 변화관리 • 역량분석/ 목표설정 • 취업스킬 및 사회 적응능력 향상 • 사후관리 (취·창업 지원)	• 심화과정(국방부 과정, 각 군 과정, 취업역량 교육) • 소자본 창업,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3개 과정	• 취·창업 정보제공 • 취·창업 활동	• 취·창업 상담 • 직업교육훈련 • 바우처 지원 • 심화과정(취·창업 워크숍, 대학위탁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내일배움카드제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 재구성□ (전역 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지원정책 추진체계 및 개요⁹⁾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인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행함
 - 국가보훈부에서는 제대(예정)군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지원을 위해 제대군인지원 정책 및 제도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 사업, 각종 참전기념행사 등 지원 사업, 제대군인주간(10월) 행사 주관, 제대군인 재취업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
 - 국방부가 ‘전역 준비’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며, 취업·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의료, 대부 등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 이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들의 전문성과 잠재력을 국가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9) 출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vnet.go.kr/VnetIndex.do>); 국가보훈부(2025). 제대군인 지원 안내서

- 지원 대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구분됨
 - 전역 후 국가보훈부 전직지원의 기본 대상은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며, 제도별로 “전역 후 기간”, “취업·창업 여부”, “등록 여부” 등 요건이 결합되어 지원이 차등 적용됨
 - 모든 지원은 전역 후 관할 보훈관서에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제공됨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에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서울, 경기남부, 인천, 경기북부, 강원, 부산, 경남, 대전, 대구, 광주)를 설치·운영함
 - 추가로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3개의 고용복지센터(천안, 구미, 고양) 내 제대군인 상담창구 운영도 병행함
 -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첫째, 교육행정(전직지원금·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집행, 위탁 교육 및 직업훈련 수행, 사이버연수원 관리), 둘째, 취업상담(경력목표 설계, 취업상담·정보제공, 취업자 사후관리), 셋째, 기업협력(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행사, 채용정보 제공·추천), 넷째, 창업지원(상담·정보제공, 사후관리, 귀농귀촌·현장탐방, 창업보육실 운영) 등이 있음
 - 각 센터에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1:1 진로 상담, 채용 정보 제공, 동행 면접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오프라인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며 온라인에서는 제대군인 전용 통합 정보망 ‘브이넷(V-net)’을 운영함
 - 온라인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를 통해 채용 공고, 교육 훈련 정보, 창업 가이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
 - 이와 함께, 직업교육훈련 신청 안내, 전직지원신청·전직지원금 신청 안내, 채용/취업/창업/해외취업/교육훈련/멘토링 정보 제공, 지역별 센터 안내, AI 맞춤 정보, 챗봇(보보) 등 기능을 제공함

□ (전역 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지원정책 주요 내용¹⁰⁾

-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크게 취업지원, 창업지원, 구직활동 지원, 직업교육 훈련, 전직지원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취업지원은 전직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밀착형 진로 설계 및 맞춤형 취업역량의 강화가 목적임
 - 심리·적성검사도구(MBTI, STRONG 등)를 활용하여 개인별 취업 분야 진로를 탐색하고 진단하며, 적합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함
 - 취업역량 함양을 위해 위탁교육·직업능력개발교육, 사이버교육·교육비 지원 등을 연계 하고, 취업지원 단계에서는 채용기업 분석, 맞춤 이력서·면접 클리닉, 채용추천·동행면접 등을 지원함
- 둘째, 창업지원은 워크숍·전문자문·보육공간·체험행사 중심으로 아이템 발굴부터 현장 체험까지 창업의 전주기 과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짐
 - 창업워크숍(기초·심화), 자문위원단 운영, 창업보육실(예비·초기 창업자 공간 제공),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상권·입지 분석 중심의 창업탐방, 점포 계약, 재무 설계,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프로그램 안내 및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함
 - 창업지원은 준비-실행-사후관리 단계로 제시되며(초기상담·정보수집/사업계획·자금·점포 계약/개업 후 성과 확인·현장컨설팅), 필요 시 전문가 자문(법률·세무·특허 등)을 연계하는 형태임
- 셋째, 구직활동 지원은 일자리 발굴·매칭·행사·기업협력으로 우수 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매칭 서비스를 실시함
 - 군 경력을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및 사무·보안·영업 등 다양한 민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며, 기업의 구인 요청 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며, 필요시 동행 면접을 지원함
 - 센터별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 행사를 수시 개최하고, 제대군인 주간(10월)에는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병행함
- 넷째, 직업교육훈련은 위탁교육·교육비·사이버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며,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한 자격증 및 실무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함

10) 출처: 국가보훈부(2025). 제대군인 지원 안내서

- 직업교육훈련은 (1)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교육비 환급 방식), (2)직업능력개발교육비(1인당 한도 지원), (3)사이버교육(온라인 수강)로 구성됨

- 다섯째, 전직활동 지원은 전직지원금을 중심으로 실직 기간 생계 안정 및 법률 구조를 지원함

- 전직지원금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군인연금 비대상자가 실업 상태에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지원액은 장기복무 월 81만 원, 중기복무 월 58만 원 수준임
- 이와 함께,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등 제반 소송 비용을 지원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정책

□ 법적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는 2012년 4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조례 제3548호)하여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함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조례 제1조)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개정(2026. 4. 17. 시행)을 통해 정착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자 중 ‘도내 정착 희망자’에서 ‘4년 이상’ 복무자 중 ‘도내 정착 희망자’로 확대함
 - 법적 지원 대상을 4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예정)한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 정착 희망자’로 규정하여, 단순 거주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함(조례 제4조)

-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정착과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조례 제2조), 이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조례 제3조)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개정(2026. 4. 17. 시행)을 통해 군장병과 함께 군인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

□ 추진체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개요¹¹⁾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는 전담 지원 조직인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분야별 핵심 기능을 규정함
 -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센터장은 담당 과장(비상기획과장)이 겸직함(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3항)
 - 센터의 업무로 취업지원(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 교육 훈련 등), 창업지원(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귀농·귀촌·귀산촌 정착지원(귀농·귀촌·귀산촌 교육, 농업경영 컨설팅,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등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함(조례 제5조 제2항)
 - 운영 원칙으로는 시행규칙을 통해 교육 훈련은 5일 이내로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1년간 취업 상담 및 고용 상태 관리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함(시행규칙 제3조)
-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 예산으로 설립·운영되는 전담 지원 조직임
 - (설립)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12년 7월 19일 개소하였으며,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국 단위 지원과 차별화된 ‘지역 밀착형’ 정착지원을 수행함
 - (목적)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1)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armyjob.kr/gwarmy>);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6).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소개

| 표 2-11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설립/연혁	2012년 7월 19일 개소	광역 지자체 유일
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5조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운영체계	센터장(道 비상기획과장 겸직)	
조직·인력	2팀 6명(행정지원팀 2명 / 교육상담팀 4명(전문컨설턴트 3 포함))	행정+전문상담
예산	357,000천 원(2026년 기준)	도비 100%
주요 기능	전직지원(취업·귀농·귀촌·귀산촌), 취업역량 강화교육(자격증), 상담·홍보, 도내 채용정보 제공 등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armyjob.kr/gwarmy>);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6).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소개

- 도(道) 재난안전실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며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음
 - (조직)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소속으로 운영되며, 센터장은 담당 과장(비상기획과장)이 겸직하여 행정력을 뒷받침함
 - (예산) 2026년 센터 예산은 357백만 원(연 약 3.5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센터 운영비 및 교육훈련비, 홍보비 등으로 집행됨
- 취업·창업·귀농·귀촌·귀산촌 등 제대군인의 정착을 위한 ‘원스톱(One-stop)’ 기능을 수행함
 - (기능) 제대군인(예정자)을 대상으로 1:1 진로 상담부터 맞춤형 교육 훈련(자격증, 귀농 체험),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까지 정착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함
 - (네트워크) 도내 군부대, 기업, 유관기관(폴리텍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
- 다만,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은 행정조직은 도(道) 직영, 일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업체 위탁 방식으로 병행되어 운영 중임
 - 이러한 운영 방식은 타 부서와의 자원 연계 권한 부족 등의 한계점을 가짐

□ 2025년 주요 지원 사업 및 성과¹²⁾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은 총 375명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과 ‘취업역량 강화’의 투트랙(Two-Track) 사업을 추진함
 - (사업 규모) 2025년 사업 목표 인원은 총 375명이며, 진로 탐색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220명)’과 실무 스킬 배양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교육(155명)’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사업 추진 결과 총 5개 사업에 대해 총 4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사업 목표인 375명을 초과 달성함

| 표 2-12 | 2025년 강원 제대군인 주요 지원 사업 및 성과

사업명	대상 인원(실적)	운영 방식	성과
취업 지원프로그램	150명	• 연 6기 운영 • 기수별 25명 / 3일	• 수수료율 100% • 취업률 72.4%
창업 지원프로그램	31명	• 연 2기 운영 • 기수별 15~16명 / 3일	• 창업 기초역량 배양 • 사업계획서 작성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	40명	• 연 2기 운영 • 기수별 20명 / 3일	• 귀농 설계 지원 • 안정적 정착 유도
취업역량강화교육 (전기, 중장비 등 자격증)	196명	• 연 6개 과정 운영 • 과정별 2~6주(위탁)	• 자격증 취득률 57% • 취업 연계 강화
특강	32명	• 1회 특강형 한시 운영	• AI 취업 연계 특강
합계	449명	-	• 교육목표(375명) 대비 초과 달성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5).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 추진 방식은 정착지원프로그램 내실화(고용서비스 전문업체 위탁)와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역량강화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됨
 - (운영 방식) 각 과정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폴리텍대학(춘천·원주·강릉),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위탁 및 연계 교육을 실시함
- 교육 수수료 후 1년간 사후관리 및 취업 알선을 통한 실질적 정착 성과 제고에 주력함
 - 단순 교육 수수료에 그치지 않고, 수료생을 대상으로 1년간 1:1 상담, 면접 코칭, 채용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도내 정착을 유도함

12)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5).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6).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소개

□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누적성과¹³⁾

- 2012년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개소한 이후 2025년까지 총 3,717명(취업 1,989명, 창업 377명, 귀농귀촌귀산촌 426명, 취업역량강화 867명, 특강 58명)의 제대군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함
 - 2025년에는 449명(취업 150명, 창업 31명, 귀농귀촌 40명,¹⁴⁾ 취업역량강화 196명, 특강 32명)이 교육을 수료함
- 총 2,792명의 취업, 창업, 귀농·귀촌·귀산촌 교육 프로그램 수료생 중 1,616명(57.9%)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취업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총 1,989명의 교육 수료생 중 1,537명(77.2%)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하여 취업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 분야를 살펴보면 시설관리·경비, 기술·운전, 조정·환경·서비스, 사회복지·사무·공무 순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누적 정착 성과는 개인 단위 정착인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정주 효과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제대군인의 정착은 본인 1인의 거주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생활기반 형성과 연계될 수 있음
 -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 수료생 중 도내 정착자 수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평균 가구원 수를 적용하면,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실제 지역 인구 유입에 기여한 규모를 가구 단위로 환산하여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정착인원 1,616명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평균 가구원 수(2.0명)를 적용할 경우,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약 3,232명 규모의 인구가 도내에 유입·정착한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¹⁵⁾

13)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6).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6).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소개

14) 2025년에는 귀농귀촌귀산촌 교육이 아닌 귀농귀촌 교육만 실시함

15)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2024년 인구총조사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시군구」의 강원특별자치도 평균 가구원 수 2.0명 적용

표 2-13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누적 성과

(단위: 명)

	구분	합계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교육 인원	합계	3,717	449	360	342	309	268	210	373	297	226	214	217	181	137	134
	취업	1,989	150	150	175	150	153	96	152	157	155	151	151	140	115	94
	창업	377	31	30	30	31	25	13	32	30	35	31	34	31	11	13
	귀농귀촌 귀산촌	426	40	39	42	42	15	-	85	30	36	32	32	10	11	12
	소계	2,792	221	219	247	223	193	109	269	217	226	214	217	181	137	119
	자격증	867	196	115	95	86	75	101	104	80						15
	특강	58	32	26												
	소계	925	228	141	95	86	75	101	104	80						15
정착 인원	합계	1,616	119	115	131	121	132	124	136	139	139	145	115	93	57	50
	취업	1,537	118	115	127	118	125	122	118	125	125	129	115	93	57	50
	창업	25	1	0	2	1	5	2	5	3	3	3				
	귀농귀촌 귀산촌	54	0	0	2	2	2	0	13	11	11	13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6).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 현황

주: 1) 취업(취업 정착지원 프로그램), 창업(창업 정착지원 프로그램), 귀농귀촌귀산촌(귀농귀촌귀산촌 정착지원 프로그램), 자격증(취업역량 강화교육 자격증 과정)

2) 2020년 귀농귀촌귀산촌 과정 취소로 “-”으로 표기

□ 2026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¹⁶⁾

- 2026년 지원사업은 전직지원 프로그램(2개 과정)과 취업역량 강화교육(6개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교육 접근성 확대 및 과정 다변화를 통해 참여 기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제시됨
 - 특히 귀농·귀촌 교육에 ‘귀산촌(산림)’ 분야를 명시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성(산림 자원)을 반영한 정착지원을 강화함
- 2026년 지원 사업 운영 원칙은 “기회 제공의 형평성”과 “과정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제시됨
 - 지원 횟수는 평생 1인 2개 과정으로 한정하며, 선발 후 불참자 및 임의 중도탈락자는 미지원으로 안내됨
 - 과정 참여방법은 홈페이지 공지 후 선착순 모집과 전화 모집을 병행하되, 취업역량 강화교육은 선발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선정함

16)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6).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소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6).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 계획표 안내

- 전직지원 프로그램은 '맞춤형 취업교육'과 '귀농·귀촌·귀산촌 교육'을 기수별로 운영함
 - 맞춤형 취업교육(3일): 자기 이해, 생애 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재취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구직 기술을 배양함
 - 귀농·귀촌·귀산촌 교육(3일): 지자체 정책 교육뿐만 아니라 농기계 실습 등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제공함
- 취업역량 강화교육은 제대군인 선호 직종을 선별하여 위탁교육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6개 국가기술자격증 과정(폴리텍 위탁 중장년 과정 4개, 외부기관 위탁, 일반 과정 2개)으로 구성됨
 - 한국폴리텍대학(춘천·원주·강릉 캠퍼스) 등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전기, 지게차, 공조 냉동, 에너지관리, 소방안전 등 6개 과정을 개설함
 - 교육 기간은 과정별 난이도에 따라 2주(지게차)에서 최대 6주(전기기능사)로 편성하여 자격증 취득률을 제고함
 - 대상자 선발은 ①취업교육 수료자 ②귀농·귀촌·귀산촌 교육 수료자 ③강원 정착 희망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함

표 2-14 | 2026년 강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사업명	대상 인원(규모)	운영 방식	기대 성과
합계	400명		
전직지원- 맞춤형 취업교육	160명	• 연 6기 운영 • 3일 과정(상시 모집) • 생애설계, 이력서/면접 코칭	• 구직 자신감 고취 • 취업 스킬 향상
전직지원- 귀농·귀촌·귀산촌 교육	30명	• 연 2기 운영 • 3일 과정 • 정책 안내, 농기계 실습 등	• 농촌 정착 유도 • 산림 분야 진출
취업역량 강화교육 (자격증)	210명	• 연 6개 과정 • 폴리텍 및 외부기관	• 1인 1자격 취득 • 전문 기술인 양성 • 도내 기업 매칭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2026).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 계획표 안내

□ 2025-2026 지원 사업 및 조례·지원사업 비교

- 2025-2026년 지원 사업은 연속성 측면에서 전직지원(취업/정착방향 설정) + 역량강화(자격증)의 기초를 유지함

- 2026년 사업은 2025년과 동일하게 진로 탐색을 위한 기본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의 큰 틀을 유지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함
- 특히 중장년 제대군인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지계차', '전기', '에너지관리' 등 핵심 자격증 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함
- 2025-2026년 지원 사업의 차이점은 '창업 교육' 제외 및 '귀산촌(산림)' 분야 신설 등 운영 효율화를 강조함
 - (창업 제외) 2025년에는 창업 교육(2기수)을 운영하였으나, 운영 결과 및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2026년 계획에는 창업 관련 정규 과정이 미편성됨
 - (귀산촌 확대) 기존 귀농·귀촌 교육에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귀산촌(산림)'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임업 및 산림 치유 등 새로운 정착 경로를 제시함
 - (과정 정예화) 자격증 과정을 기존 7개에서 6개로 정예화하고 소방안전 등 트렌드를 반영한 과정을 내실화함
-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례상 규정과 실제 운영 사업 간 차이가 발생함
 - 조례 제5조 제2항 및 조례 시행규칙 제3조는 창업 융자금 이차보전, 귀농 주택 구입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2025~2026년 센터 운영 계획은 '교육 훈련'과 '상담'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어, 조례 근거와 현실 운영 간의 명확한 불일치가 존재함
 - 이는 조례 제정 당시 재정 지원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예산(이차보전금, 주택지원비 등)이 편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

| 표 2-15 | 2025-2026 지원 사업 및 조례 비교

구분	조례·시행규칙	2025-2026 지원사업	비고
창업 지원	-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알선 - 창업융자금 이차보전(규칙 제3조)	(25년) 창업교육 2기 운영 (26년) 정규 교육 과정 없음	- 이차보전 미실시(예산 없음) - 교육 미편성
귀농 지원	- 농가주택 구입 및 수리비 지원 - 귀농 창업자금 지원(조례 제5조)	- 귀농·귀촌·귀산촌 정책 교육 - 현장 탐방 및 실습	- 직접 자금/주택 지원 부재 - 교육/체험 한정 운영
취업 지원	- 직무능력 향상 교육 - 수료 후 1년간 사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국가기술자격증 위탁 교육 - 맞춤형 취업 상담 - 취업 후 6개월 정착관리	- 사후관리 기간 불일치 - 자격증 중심의 운영 정착

3) 중앙-강원 지원정책 비교

□ 정책 목표의 차별성: (중앙) 보편적 사회복귀 및 전직 vs (강원) 지역 정착

- 중앙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전역 군인의 전반적인 취업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보편적 사회복귀를 목표로 함
 - 국방부는 전역예정 간부가 전역 이후 경력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교육·컨설팅 중심의 “전역 전 준비”를 제공함
 - 국가보훈부는 전역 이후 제대군인의 취업·창업·훈련·전직활동(전직지원금 등)을 통합 지원하여 개인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전역 후 전직지원”을 제공함
 - 중앙정책의 지향점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전직 지원 체계에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단순한 취업을 넘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도내 유입·정착(정주) 촉진을 목표로 함
 - 강원특별자치도는 제대군인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주도할 ‘핵심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원 정책의 핵심은 “취업지원”도 있으나, 제대군인이 강원로 전입·정주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조함
 - 즉, 중앙이 “전역 후 사회복귀(전직)”를 목표로 한다면, 강원은 “지역 정착(전입·정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목표가 다름
 -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센터를 운영하며, 국가 안보 자산을 지역의 발전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명확하고 차별화된 전략적 목표를 가짐

□ 정책대상 및 적용 범위의 차이: (중앙) 전국 단위 vs (강원) 지역 정착 희망자

- 중앙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대상은 복무기간(중기·장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의 모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괄함
 - 국방부는 전역예정 간부를 중심으로,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나 향후 정착 희망 지역과 무관하게 법적 복무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보편적 지원을 제공받음

-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복무기간(4년 이상)과 강원특별자치도 정착 희망자로 정책 대상을 특정하여 한정함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4년 이상 복무 요건 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정착 희망자’라는 지리적·목적적 요건을 추가하여 지역 밀착형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즉, 대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선택(강원 정착)”을 포함하여, 지원의 최종 목표를 지역 정착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
 - 결과적으로 강원 대상은 중앙 대상과 일부 중첩되지만, 지역 정착이라는 조건(정책목표)이 추가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지원 방식 및 수단 비교: (중앙) 전국 표준 정책 vs (강원) 지역 정착 정책

- 중앙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제도(급부) + 서비스(상담·매칭) + 훈련(교육비·위탁/사이버)’를 결합한 종합 전직지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성 지급 등 직접 지원에 강점을 가짐
 - 국방부는 진로교육-전직기본교육-전직컨설팅/맞춤형 전문교육 등 교육·컨설팅 중심이며, 국가보훈부는 센터 기반 상담(경력설계)-취업알선-기업협력(일자리 발굴)-창업지원-직업 훈련 지원-전직지원금 등 서비스와 제도 집행이 결합됨
 - 또한, 구직 기간 중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장기 81만 원, 중기 58만 원) 등 재정적 유인책을 가동함
 - 지원수단의 성격은 “전직 역량 강화”와 “취업·창업 성과”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며, 전국 표준화·규모화가 용이함
-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취업교육·자격과정·귀농귀촌귀산촌 등)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형 패키지로 구성됨
 - 지원수단은 프로그램형(교육·과정 운영) 비중이 높고, 지역의 유관기관·시군 연계(정착지원)를 통해 정착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핵심임
 - 즉, 중앙이 “제도·급부를 포함한 표준 패키지”라면, 강원은 “정착 목표에 맞춘 지역 프로그램 패키지” 성격이 강함

- 다만, 조례상에는 창업자금 이차보전, 농가주택 구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근거가 있으나, 취업역량강화 교육(전기, 지게차 등 자격증)과 귀농·귀촌·귀산촌 현장 체험 프로그램 등 간접적 지원 위주로 운영됨

□ 지원 정책 주요 내용 비교: 공통점 vs 차별점

-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기능적으로 중복된 부분과 강원 특별자치도만의 차별적으로 특화된 정책이 혼재되어 있음
 -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점, 직무능력향상 추구, 취·창업 지원 등 목적과 정책 지원에서 중복성이 존재함
 -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귀산촌(산림) 교육'은 강원만의 지리적 특성과 농산촌 환경을 적극 반영한 특화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임
- 이 외에도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전직활동 지원, 정착지원 정책에서도 공통점 및 차별점이 존재함
 - 전직활동 지원 정책은 중앙은 전직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수단이 존재하며 구직기간 소득공백을 완충하는 기능이 있으나, 강원은 전직지원금 등의 현금성 급부가 아닌 교육·프로그램 중심이므로 중앙과 강원만의 지원수단 성격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됨
 - 정착지원 정책은 중앙은 전국 표준 정책으로 지역 정착 자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강원은 정책목표가 지역 정착이므로 정착지향 프로그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중앙과 강원만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핵심적인 차별점이라 판단됨

표 2-16 | 중앙-강원 제대군인 지원정책 비교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부	국방부
근거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주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2012년 7월	(강원센터) 2019년 7월	(춘천/인제/강릉센터) 2022년 1월 (2025. 12. 폐쇄)
지원 대상	• 4년 이상 복무, 장교·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 또는 전역 예정 •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 희망자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 또는 예정자	• 장병,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부	국방부
정책 목표	• 우수 인력 도내 정착	• 경제적 자립 및 보편적 사회복귀	
중복 영역	• 취업지원·자격증 취득 지원		
차별성	• 지역 정착 목표	• 전국 단위 표준화·제도 기반 전직 지원	
주요 사업	• 위탁업체 자체교육 - 맞춤형 취업교육 - 귀농·귀촌·귀산촌 교육 - 멘토링 교육 • 위탁업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취업역량강화교육 • 군부대 홍보교육 및 취·창업 상담 • 도내 취업·귀농·귀촌·귀산촌 지원	• 직업능력개발 교육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제대군인 사이버 연수원 • 취업 워크숍, 특강, 설명회 운영 • 전국단위 취업 지원	• 중기/장기복무 간부 - 진로교육, 기본교육 - 센터별 상담 후 취업지원 • 청년장병 및 단기 간부 - 진로도움 프로그램 교육(4H) - 찾아가는 진로도움 프로그램 상담 • 맞춤형 전문교육 - 전역 전 2개 과목 • 창업, 귀농 멘토 연계 지원 • 전국단위 취업 지원

주: 설립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내 지원기관 설립으로 한정함

4.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 검토 개요

- 본 연구는 제대군인의 강원 정착지원정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사회정착, 삶의 질, 가족·주거·생활안정, 지원체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 기존 제대군인 연구는 주로 취업실태, 전직지원 제도의 한계,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연계성 부족에 초점을 두어 왔음
 - 최근에는 제대군인의 직업전환 과정, 삶의 질, 가족관계, 주거 안정, 사회적 관계망 등 사회정착 전반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단순한 취업 여부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안정적 소득, 주거 기반, 가족 동반 정착, 군 경력 활용 가능성, 지원체계 연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연구들은 제대군인 지원정책이 개인의 취업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형·가족동반형·지역정착형 지원체계로 확장될 필요성을 강조함

- 다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전국 단위의 중앙정부 제도 개선이나 전직지원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특정 지역으로의 정착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설계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제대군인 사회정착의 주요 문제점

-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 문제는 역량 미스매치, 비자발적 퇴직에 따른 심리적 불안, 공급자 중심 정책과 현장 수요 간 괴리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군 복무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 리더십, 조직관리 역량이 민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기술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 경력 활용의 어려움이 발생함
 - 둘째, 계급정년 등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은 제대군인의 정체성 혼란, 심리적 상실감, 사회적 소외감을 유발하여 직업전환과 정착 준비를 어렵게 함
 - 셋째, 현행 지원정책은 교육훈련과 단기적 구직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군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 가족생활, 주거 안정, 지역 적응 지원과 괴리가 발생함

표 2-17 |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 관련 문제점

주요 연구	주요 내용
양안나·정철영(2011) 김점석·박효선(2016) 정철영 외(2022)	• (역량 미스매치) 군에서 습득한 고도의 전문성 및 리더십과 민간 노동시장이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실무 기술(IT, 비즈니스 등) 간의 격차 발생 • (심리적 불안정) 비자발적 퇴직(계급 정년 등)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 및 사회적 소외감 경험 • (정책 체감도 저하) 수요자의 구체적 요구(산업 맞춤형 일자리, 거주지 중심 밀착 지원 등)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정책 구조

□ 제대군인 정착 요인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제대군인 정착 요인은 안정적 소득과 경제활동, 주거 안정, 가족 동반 정착, 군 경력 활용, 전역 전후 연계 지원,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안정적 소득과 경제활동: 제대군인의 삶의 질과 생활안정은 지속 가능한 소득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지역 정착 역시 일자리와 경제활동 기반 없이는 지속되기 어려움
 - 주거 안정과 초기 생활기반: 제대군인은 전역 이후 주택 마련, 자녀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주거 안정과 초기 생활기반 지원이 정착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함

- 가족동반 정착과 사회관계: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 가족관계 만족도, 지역사회 관계망은 제대군인의 정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정착정책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 단위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군 경력의 민간 활용 가능성: 제대군인의 직업전환은 군 경력을 민간 직무역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므로, 군 경력 인정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이 중요함
- 전역 전 준비와 전역 후 정착의 연계: 정착은 전역 이후 단기 프로그램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역 전 정보 제공, 전역 직후 지원, 전입 이후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단계형 지원체계가 필요함
- 지원체계와 거버넌스: 제대군인 지원은 취업, 교육, 주거, 가족, 지역사회 적응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므로, 부처 간 협력과 지역 단위 유관기관 연계체계가 중요함

| 표 2-18 | 제대군인 정착 요인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구 내용	주요 연구	주요 내용
안정적 소득·경제활동	이현주(2025), 양혜원·유근환(2023)	• 제대군인의 삶의 질과 안정적 생활의 핵심 전제로 기준중위소득 이상 소득과 경제활동 참여가 확인됨 • 이는 정착의 전제가 단순 전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 확보임을 보여줌
주거 안정 및 초기 생활기반	김민혁·김수환(2024), 정철영 외(2022)	• 전역 후 제대군인은 가족 생활비, 자가 마련, 자녀 교육·양육비 부담이 크고, 주거 마련 과정에서 대출 의존도가 높아 주거불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함께 주거지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함이 지적됨
가족동반 정착 및 사회관계	이현주(2025), 김민혁·김수환(2024), 정철영 외(2022)	• 가족관계 만족도, 대화상대 존재, 단체참여, 여가활동 만족도는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됨 • 또한 배우자 경력단절, 자녀 교육, 가족갈등 등은 정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되어, 정착정책이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동반 패키지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군 경력의 민간 활용 및 직업전환	양안나·정철영(2011), 홍선이 외(2009), 김상일 외(2015)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전환 과정은 군 경력을 사회 직업역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군 경력을 민간 역량으로 “바꿔쓰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분석됨 • 이는 정착정책에서도 지역 산업과 군 경력을 연결하는 일자리 발굴이 핵심임을 시사함
군 복무 중 준비-전역 후 정착의 연계	정철영 외(2022), 김민혁·김수환(2024)	• 전직지원 시기와 짧은 준비기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군 복무 중 진로지도 강화, 일경험 기회 확대, 생애주기 일체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정착은 전역 후 단기 프로그램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전역 전 준비-전역 직후 지원-전입 이후 유지관리를 아우르는 단계형 체계가 필요함
지원체계·거버넌스	정철영 외(2022), 남응우(2015)	•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부처 간 협력 강화, 제대군인 특화 일자리 창출, 주거지원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함 • 제대군인 인적자료시스템 구축, 취업지원·교육지원 네트워크, 군 경력의 사회인증 제도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과제로 제시됨

□ 선행연구의 시사점

-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제대군인 정착지원정책은 단순한 취업지원이나 교육훈련 제공을 넘어, 일자리·주거·가족생활·지역사회 적응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착지원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은 개인의 취업 여부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 여건, 주거 안정, 지역사회 관계망, 군 경력 활용 가능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됨
 - 따라서 강원형 정착지원정책은 제대군인 개인의 전직지원에서 가족 동반 정주 지원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연구가 중앙정부 중심의 전직지원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경제 여건과 제대군인 밀집 특성을 반영한 지역 정착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특히 강원은 접경지역, 산림·농산촌 자원, 제대군인 거주 비중, 중·장년층 유입 구조 등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므로, 중앙정부의 보편적 전직지원과 구분되는 지역 맞춤형 정착지원정책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대군인의 안정적 도내 정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가족 정주, 지역 사회 네트워크,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5. 소결

□ 강원특별자치도 여건과 제대군인 정착정책의 필요성

-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 산업 인력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여건 속에서 지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
 - 20대 청년층의 구조적 순유출이 지속되는 반면, 40~60대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유입되는 비대칭적 인구이동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산업 측면에서도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중심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한 한계를 보임

- 이러한 여건에서 제대군인은 강원도의 인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대상으로 볼 수 있음
 - 강원 내 제대군인은 전체 제대군인의 7.2%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음
 - 매년 500~600명 내외의 제대군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은 지역 인구 유지와 경제활동 기반 확충 측면에서 의미가 큼
-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 개정은 제대군인 정착정책의 제도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줌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개정(2026. 4. 17. 시행)을 통해 지원대상이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되어 일부 단기 복무 제대군인까지 정책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또한 군인가족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 정주 지원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강화됨

□ 현행 추진체계의 성과와 한계

- 중앙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전역 전·후를 연계한 전국 단위 전직지원체계로서 제도적 기반과 지원수단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음
 - 국방부는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컨설팅을 통해 경력전환 준비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취업·창업·훈련·전직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함
 - 다만 중앙정부 정책은 특정 지역으로의 정착을 목표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지역 정착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
-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정책과 달리 '도내 유입과 정착'을 정책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강원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 예산으로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대상도 '강원 정착 희망자'로 구체화하고 있음
 - 이는 강원 정책이 단순한 전직지원이 아니라 지역 인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착지원 정책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현행 강원 정책은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은 교육·상담·자격증 과정 등 전직지원 성격이 강해 중앙정부 정책과 기능적으로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 조례상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농가주택 구입·수리비 지원 등 직접적인 정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교육·상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센터 운영방식상 도청 내 유관 부서와의 자원 연계, 도내 기업 및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강원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개인 전직지원 중심에서 가족 동반 정착지원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책은 일자리, 주거, 가족생활, 지역 적응,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단순 교육·상담 기능을 넘어, 제대군인의 도내 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 정착지원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III

제대군인 정착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1. 조사 설계

1) 설문조사 설계

□ 조사 목적 및 대상

- 본 설문조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제대(예정)군인의 강원 지역 정착 의향, 정착 결정 요인, 정착 저해요인, 필요 지원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
 - 제대군인은 강원 지역의 인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대상이나, 실제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제약과 정책 수요는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설문조사는 제대(예정)군인의 지역 정착 관련 인식과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조사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예정)군인 58명이며,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수자를 중심으로 구성함
 - 조사대상은 전역 이후 진로와 지역 정착을 준비하고 있는 정책 수요자로, 강원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조사 방법 및 항목

- 설문조사는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함

| 표 3-1 | 설문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제대(예정)군인 중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 병행
조사 기간	2026년 3월 26일 ~ 4월 1일
조사 장소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응답자 수	58명

- 설문지는 응답자의 기본 특성, 강원 정착 의향, 직업전환 준비도, 생활 여건 인식, 취업 가능성 인식, 지원정책 효과, 가족의 지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주요 인식 측정 문항에는 5점 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여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 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함

| 표 3-2 | 설문구성

구분	내용	방식
응답자 일반 특성	성별, 연령, 총 군 복무기간, 결혼 및 가족 구성, 거주 형태, 강원 근무 경험	객관식
강원 지역 정착 의향	강원 장기 거주 의향, 도내 취업·창업 우선 고려 여부, 정착 추천 의향, 정착 이유, 정착 저해요인, 필요 지원정책	5점 리커트 척도 + 복수응답
직업전환 준비도	군 경력의 민간 활용 가능성, 민간 조직 적응 준비, 진로계획의 구체성, 자격 취득 및 교육훈련 준비 수준	5점 리커트 척도
강원 생활 여건	자연환경, 여가·문화 여건, 주거비용, 의료·편의시설, 자녀 교육·돌봄 여건에 대한 인식	
강원 내 취업 가능성	경력 활용 가능 일자리 존재 여부, 안정적 소득 확보 가능성, 새로운 직업 탐색의 유리성	
강원 지원정책 효과	취업·창업 교육의 유용성, 상담 및 정보 제공의 도움 정도, 정착 준비 지원 효과, 강원 정착 고려에 미치는 영향	
가족의 지지	강원 정착에 대한 가족의 동의와 지지, 생활환경에 대한 긍정성, 가족의 일자리·사회관계 형성 가능성, 가족 삶에 대한 기대효과	

2) 심층인터뷰 설계

□ 조사 목적 및 대상

- 심층인터뷰는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강원 정착 인식의 배경과 정책 수요의 구체적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함
 -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는 강원 정착 의사, 정착 결정 요인, 정착 과정의 애로사항, 필요한 지원정책 등을 확인함
 - 담당자 대상으로는 센터 운영 경험, 현행 지원정책의 한계,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및 차별화 과제, 향후 정책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함
- 인터뷰 대상은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2명, 상담사 4명, 센터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제대(예정)군인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함
 - 담당자 인터뷰는 정책 공급자의 운영 경험과 현장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제대(예정)군인 인터뷰는 정책 수요자의 실제 정착 의향과 지원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 조사 방법 및 항목

- 심층인터뷰 조사는 사전에 설계된 반구조화된 인터뷰지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오프라인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함
 - 인터뷰 조사는 2026년 3월 17일, 3월 25일, 3월 31일 총 3일에 걸쳐 대상자 그룹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함
- 이를 통해 설문조사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인식의 배경과 정착 결정 과정에서 실제 경험,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표 3-3 | 심층인터뷰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2명, 상담사 4명, 제대(예정)군인 7명
조사 방법	반구조화된 인터뷰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심층인터뷰
조사 일정 및 대상	2026년 3월 17일: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2명, 상담사 4명 2026년 3월 25일: 제대(예정)군인 2명 2026년 3월 31일: 제대(예정)군인 5명
조사 장소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 심층인터뷰 조사 항목은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문항과 대상별 특화문항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 공통문항은 강원 지역 정착에 대한 인식, 정착 결정 및 저해 요인, 필요 지원정책,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및 지원정책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함
 - 담당자(센터 공무원 및 상담사) 대상 특화 문항은 제대군인 지원 업무의 실무적 환경과 정책 집행 체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제대(예정)군인 대상 특화 문항은 수요자의 전역 후 진로 준비 실태와 강원 지역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집중함
- 인터뷰 과정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정착 준비 과정이나 정책 운영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함

| 표 3-4 | 심층인터뷰 문항 구성

구분	내용
공통문항	강원 지역 정착에 대한 인식, 정착 결정 및 저해 요인, 필요한 지원정책 등
담당자	제대군인 정착에 필요한 주요 지원정책, 센터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원형 정착지원 정책의 운영 방향 등
제대군인	전역 이후 진로와 강원 정착 의향, 주거·일자리·가족 등 정착 과정의 애로사항 등

2. 제대(예정)군인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제대(예정)군인은 총 58명으로, 응답자 전원이 남성이며 50대가 44명(7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총 군 복무기간은 20년 이상이 55명(94.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본 조사는 장기복무 후 전역을 앞두고나 전역한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구성됨
 - 강원 근무 경험 역시 20년 이상이 22명(37.9%), 10~15년 미만이 15명(25.9%)으로 나타나, 도내 생활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집단으로 볼 수 있음

- 가족 구성은 기혼·자녀 있음이 51명(87.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형태는 자가 33명(56.9%), 군관사 17명(29.3%)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제대군인의 정착 문제가 개인의 취업이나 거주 선택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생활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함

표 3-5 |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문항	항목	명(%)	문항	항목	명(%)
연령대	20대	1(1.7)	성별	남성	58(100.0)
	30대	2(3.4)		여성	0(0.0)
	40대	6(10.3)	가족 구성	미혼	2(3.4)
	50대	44(75.9)		기혼(자녀 없음)	5(8.6)
	60대 이상	5(8.6)		기혼(자녀 있음)	51(87.9)
강원 근무 경험	5년 미만	6(10.3)	거주 형태	군관사	17(29.3)
	5년 이상~10년 미만	3(5.2)		자가	33(56.9)
	10년 이상~15년 미만	15(25.9)		전/월세	8(13.8)
	15년 이상~20년 미만	12(20.7)	복무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1.7)
	20년 이상	22(37.9)		10년 이상~20년 미만	2(3.4)
				20년 이상	55(94.8)

□ 직업전환 준비도 결과

- 제대(예정)군인의 직업전환 준비도는 심리적 준비와 군 경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으나, 구체적인 진로 설계와 자격 취득 준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민간 직업 환경 적응을 위한 심리적 준비도는 4.09점, 군 경험 및 역량의 민간 활용 가능성 인식은 3.9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 구체적인 진로 및 경력 계획 수립 여부는 3.52점, 자격 취득 및 교육훈련 준비 수준은 3.7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이는 제대(예정)군인들이 민간사회 적응에 대한 기본적 자신감은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 진로 설계와 실무적 준비에는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 따라서 정착지원정책은 단순한 심리적 자신감 제고를 넘어, 군 경력의 민간 직무 전환, 진로 설계, 맞춤형 교육훈련 연계까지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음

표 3-6 직업전환 준비도 결과

(단위: 명, %, 점)

구분(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합계
군 경험 및 역량의 민간 활용 가능성 인식	2(3.4)	3(5.2)	12(20.7)	21(36.2)	20(34.5)	3.93	58(100.0)
민간 직업 환경 적응을 위한 심리적 준비도	0(0.0)	3(5.2)	12(20.7)	20(34.5)	23(39.7)	4.09	58(100.0)
구체적인 진로 및 경력 계획 수립 여부	0(0.0)	12(20.7)	14(24.1)	22(37.9)	10(17.2)	3.52	58(100.0)
자격 취득 및 교육훈련 준비 수준	1(1.7)	6(10.3)	14(24.1)	23(39.7)	14(24.1)	3.74	58(100.0)

□ 강원 생활 여건 인식결과

- 강원 생활 여건에 대한 인식은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반면, 의료·편의 시설과 자녀 교육·돌봄 여건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자연환경 및 여가 향유 여건은 4.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 응답 비율도 89.7%로 매우 높음
 - 반면 의료·편의시설 인프라는 3.02점, 자녀 교육 및 돌봄 여건은 3.14점으로 낮게 나타나 가족 단위 정착과 관련된 필수 생활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확인됨
- 주거비용의 적절성은 3.21점, 여가·문화생활 여건은 3.31점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음
 - 이는 강원도의 자연환경은 정착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 교육, 돌봄, 생활편의 등 가족생활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3-7 강원 생활 여건 인식결과

(단위: 명, %, 점)

구분(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합계
자연환경 및 여가 향유 여건	0(0.0)	0(0.0)	6(10.3)	28(48.3)	24(41.4)	4.31	58(100.0)
여가·문화생활 여건	1(1.7)	10(17.2)	23(39.7)	18(31.0)	6(10.3)	3.31	58(100.0)
주거비용의 적절성	2(3.4)	11(19.0)	23(39.7)	17(29.3)	5(8.6)	3.21	58(100.0)
의료·편의시설 인프라	3(5.2)	14(24.1)	25(43.1)	11(19.0)	5(8.6)	3.02	58(100.0)
자녀 교육 및 돌봄 여건	0(0.0)	13(22.4)	28(48.3)	13(22.4)	4(6.9)	3.14	58(100.0)

□ 강원 내 취업 가능성 인식결과

- 강원 내 취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군 경력 활용 가능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 확보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낮았음
 - 군 경력 활용 가능 일자리 존재 여부는 2.93점,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취업 기회 여부는 2.95점으로 모두 3점 미만으로 나타남
 - 새로운 직업 탐색의 지리적 유리함은 2.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강원의 산업·지리적 여건이 새로운 진로 탐색에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됨
- 이는 강원 정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 일자리 부족에 있음을 보여줌
 - 향후 제대군인 정착지원정책은 군 경력과 지역 일자리를 연계하고,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매칭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3-8 강원 내 취업 가능성 인식결과

(단위: 명, %, 점)

구분(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합계
군 경력 활용 가능 일자리 존재 여부	2(3.4)	14(24.1)	31(53.4)	8(13.8)	3(5.2)	2.93	58(100.0)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취업 기회 여부	3(5.2)	11(19.0)	33(56.9)	8(13.8)	3(5.2)	2.95	58(100.0)
새로운 직업 탐색의 지리적 유리함	5(8.6)	18(31.0)	24(41.4)	8(13.8)	3(5.2)	2.76	58(100.0)

□ 강원 지원정책 효과 인식결과

- 강원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남
 - 상담 및 정보 제공의 실질적 도움 정도는 4.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 응답 비율도 91.4%로 매우 높음
 - 취업·창업 교육의 실질적 유용성은 4.16점, 정착 준비 지원 효과는 4.17점, 강원 정착 고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4.19점으로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남

- 이는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전직 준비와 정착 고려 과정에서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 다만 앞서 확인된 일자리, 의료·생활 인프라, 가족생활 기반의 제약을 고려할 때, 기존 교육·상담 기능에 일자리 연계, 주거, 가족지원 등 실질적 정착 지원을 결합할 필요가 있음

표 3-9 | 강원 지원정책 효과 인식 결과

(단위: 명, %, 점)

구분(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합계
취업·창업 교육의 실질적 유용성	1(1.7)	2(3.4)	6(10.3)	27(46.6)	22(37.9)	4.16	58(100.0)
상담 및 정보 제공의 실질적 도움 정도	0(0.0)	0(0.0)	5(8.6)	27(46.6)	26(44.8)	4.36	58(100.0)
정착 준비 지원 효과	0(0.0)	2(3.4)	7(12.1)	28(48.3)	21(36.2)	4.17	58(100.0)
강원 정착 고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0(0.0)	2(3.4)	7(12.1)	27(46.6)	22(37.9)	4.19	58(100.0)

□ 가족의 지지 인식 결과

- 강원 정착에 대한 가족의 전반적 동의와 지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강원 생활 환경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강원 정착에 대한 가족의 전반적 동의 및 지지는 4.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 응답 비율도 81.0%로 나타남
 - 반면 가족의 강원 생활환경 긍정적 인식은 3.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의료·교육·문화 등 실제 생활 여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을 보여줌
- 가족의 일자리 및 네트워크 긍정적 인식은 3.88점, 강원 정착이 가족 삶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는 3.93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남
 - 이는 제대군인의 강원 정착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되기보다,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돌봄, 가족의 생활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함

| 표 3-10 | 가족의 지지 결과

(단위: 명, %, 점)

구분(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합계
강원 정착에 대한 가족의 전반적 동의 및 지지	0(0.0)	2(3.4)	9(15.5)	23(39.7)	24(41.4)	4.19	58(100.0)
가족의 강원 생활환경 긍정적 인식	0(0.0)	7(12.1)	15(25.9)	26(44.8)	10(17.2)	3.67	58(100.0)
가족의 일자리 및 네트워크 긍정적 인식	0(0.0)	3(5.2)	15(25.9)	26(44.8)	14(24.1)	3.88	58(100.0)
강원 정착이 가족 삶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	0(0.0)	6(10.3)	7(12.1)	30(51.7)	15(25.9)	3.93	58(100.0)

□ 강원 지역 정착 의향 및 정책 수요 결과

- 제대(예정)군인의 강원 지역 정착 의향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강원에 대한 정착 의향은 매우 높게 나타남
 - ‘강원 장기 거주 의향(4.76점)’은 3개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 이상 응답 비율도 57명(98.3%)으로 매우 높게 조사됨
- ‘강원 취업·창업 우선 고려(4.43점)’와 ‘타 제대군인에게 강원 정착 추천 의향(4.26점)’ 역시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강원 정착과 도내 경제활동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11 | 강원 지역 정착 의향 및 정책 수요 결과

(단위: 명, %, 점)

구분(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합계
강원 장기 거주 의향	0(0.0)	0(0.0)	1(1.7)	12(20.7)	45(77.6)	4.76	58(100.0)
강원 취업·창업 우선 고려	2(3.4)	1(1.7)	6(10.3)	10(17.2)	39(67.2)	4.43	58(100.0)
타 제대군인에게 강원 정착 추천 의향	2(3.4)	0(0.0)	9(15.5)	17(29.3)	30(51.7)	4.26	58(100.0)

- 제대(예정)군인의 강원 지역 정착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가족 의견 및 주변 동료와 지인 등의 인간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장기 거주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가족 의견'이 28명(26.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변 동료 및 친구 등 지인' 19명(17.8%), '자연환경' 18명(16.8%), '경제적 이유' 16명(15.0%)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강원 장기 정착을 망설이게 하는 정착 저해요인은 적합한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남
 - 적합한 일자리 부족은 48명(46.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생활 인프라 부족 24명(23.3%), 배우자 일자리 문제 11명(10.7%), 자녀 교육·돌봄 문제 10명(9.7%) 순으로 나타남
 -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일자리 연계 지원 50명(43.5%), 생활정착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24명(20.9%), 주거 지원 21명(18.3%) 순으로 조사됨
- 종합적으로 제대(예정)군인들은 강원에 정착 여부를 결정할 때 가족의 동의와 같은 정서적·인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실제 이주를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이자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인프라'임
 - 따라서, 실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확보가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며, 이에 더해 주거와 생활정착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12 | 강원 장기 정착 의향 이유, 정착 저해요인 및 필요 정책(중복 선택)

정착 의향 이유	명(%)	정착 저해요인	명(%)	정착을 위한 필요정책	명(%)
가족 의견	28(26.2)	적합한 일자리 부족	48(46.6)	일자리 연계 지원	50(43.5)
주변 동료 및 친구 등 지인	19(17.8)	의료·생활 인프라 부족	24(23.3)	생활정착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24(20.9)
자연환경	18(16.8)	배우자 일자리 문제	11(10.7)	주거 지원 (공공임대, 빈집 활용 등)	21(18.3)
경제적 이유 (집값 등)	16(15.0)	자녀 교육·돌봄 문제	10(9.7)	배우자 일자리 지원	7(6.1)
일자리	10(9.3)	지역 적응 및 주변 지인 부족	8(7.8)	창업 지원	5(4.3)
강원 정책	9(8.4)	주거 불안	2(1.9)	자녀 교육·돌봄 지원	4(3.5)
기타	4(3.7)	기타	0(0.0)	귀농·귀촌·귀산촌 지원	2(1.7)
귀농·귀촌·귀산촌	3(2.8)			기타	2(1.7)
합계	107(100.0)	합계	103(100.0)	합계	115(100.0)

주: 중복응답 문항으로, 비율은 응답자 수가 아닌 각 문항의 총 선택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3. 심층인터뷰 결과

1) 제대(예정)군인 심층인터뷰 결과

□ 강원 정착 의지 및 이유

- 제대(예정)군인 심층인터뷰 결과, 강원 정착 의지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장기간 강원 접경지역에서 복무한 제대(예정)군인은 강원을 이미 익숙한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거주 및 선호, 자연환경, 개선된 교통 접근성 등이 정착 의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특히 오랜 복무기간 동안 형성된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생활의 익숙함은 강원 정착을 고려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확인됨
- 다만 실제 정착 여부는 일자리와 생활인프라 여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터뷰 참여자들은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였으며, 의료서비스, 교통 접근성, 생활편의시설 역시 정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함
 -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됨
- 종합하면, 제대(예정)군인의 강원 정착 의지는 높지만, 실제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의료·생활 인프라 등 현실적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전직 준비 및 취업 인식

- 제대(예정)군인의 전직 준비 수준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군 경력 활용 가능성과 실제 취업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확인됨
 - 일부 응답자는 군 경력과 연계된 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전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전역 이후 진로 방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 상태였음
 - 정착지원센터의 교육과 상담은 전직 준비 초기 단계에서 정보를 얻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단기 자격증 중심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인터뷰 참여자들은 단순한 일자리 부족보다 군 경력과 조직관리 경험에 부합하는 적정 보상·지위를 갖춘 일자리 부족을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함
 - 이에 따라 교육 제공 자체보다 도내 기업·기관과의 실질적 채용 연계와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직지원은 교육 제공 자체보다 실제 취업 연계와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가족 동반 정착 인식

- 강원 정착은 제대군인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기보다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잦은 근무지 이동을 경험한 군인가족에게 전역 후 정착지 선택은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 의료·생활 인프라 등 가족 전체의 생활기반과 밀접하게 관련됨
 - 특히 배우자의 경제활동 가능성, 자녀의 학교생활과 돌봄 여건, 의료 접근성은 가족 동반 정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됨
- 가족생활 기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대군인 본인은 강원 정착을 희망하더라도 가족은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가족 분리 거주나 타 지역 이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정착지원정책은 제대군인 개인 중심의 취업지원에서 가족 동반 정주 지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강원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 현행 강원의 교육·상담·자격증 과정은 제대(예정)군인의 전직 준비와 정보 획득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진로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됨

- 그러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일자리·주거·가족지원을 결합한 종합 정착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단순 교육 수료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정착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내 우수 기업과의 직접 채용 연계, 초기 주거 안정 지원, 가족생활 기반 지원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는 강원형 정착지원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에서 '일자리+주거+가족'을 결합한 종합 정착 패키지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제대(예정)군인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3 제대(예정)군인 심층인터뷰 주요 결과

구분	내용
강원 정착 의지 및 이유	• (정착 동인) 장기간 접경지역 복무에 따른 생활권 확립 및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개선 • (저해 요인) 고연령화에 따른 중증 질환 대비 등 의료 인프라 취약성이 타 지역 이주의 핵심 원인 • (유지 기제) '작은 영화관(투루)' 등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가 자녀 유출 방지 및 정주 만족도에 기여
전직 준비 및 취업 인식	• (준비 격차) 자격증 취득·교육 이수 등 전직 준비 수준에 개인별 편차 존재 • (프로그램 인식) 교육·상담 프로그램은 초기 정보 획득과 방향 설정에는 유용하나, 실제 취업 연계성은 제한적 • (핵심 문제) 단순 일자리 부족보다 군 경력과 역량에 부합하는 적정 보상·지위의 일자리 부재가 핵심
가족 동반 정착 인식	• (의사결정 구조) 정착 여부는 개인보다 배우자·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 의사결정 성격이 강함 • (분리 정착 우려) 잦은 이사로 인한 배우자의 경력 단절 및 도내 양질의 일자리 확보 한계가 '기러기 가족' 유발 • (정책 시사점) 개인 취업 지원을 넘어 배우자 일자리 및 자녀 인프라를 포괄하는 '가족 동반 정착 패키지' 필요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 (체감 효과) 교육·상담·자격증 과정은 전직 준비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짐 • (현행 한계) 단순 교육 수료를 넘어 도내 우수 기업의 '직접 채용'으로 직결되는 매칭 시스템 부재 지적 • (정책 수요) 일자리·주거·가족 지원을 결합한 '강원형 종합 정착 패키지' 필요성 제기

2) 담당자 심층인터뷰 결과

□ 강원 정착 여부 결정 요인

- 담당자 심층인터뷰 결과, 제대(예정)군인의 강원 정착 여부는 강원 근무 경험, 생활권 형성 정도, 가족 생활기반, 도내 일자리 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간 강원에서 복무한 제대군인은 강원을 익숙한 생활권으로 인식하여 정착 의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 강원 근무 경험이 짧거나 가족의 생활기반이 수도권에 형성된 경우에는 타 지역 이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장 담당자들은 강원 정착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일자리 불일치와 가족생활 여건의 한계를 지적함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기대 임금과 관리자급 직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내 일자리가 부족하여, 구직 과정에서 타 지역 이주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함
 - 또한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 의료·문화 인프라 등 가족 단위 생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착을 포기하거나 분리 거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함
- 종합하면, 담당자들은 강원 정착 실패를 개인의 의지 부족보다 지역 내 수용 기반의 구조적 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역할 인식

- 담당자들은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단순 취업지원기관을 넘어 강원 정착을 위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
 - 제대군인의 도내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가족지원, 지역 적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안내하고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지원체계와 달리, 강원 센터는 지역 생활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밀착형 정착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다만 현행 센터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 속에서 교육·상담·정보 제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착지원 전 과정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자들은 향후 센터가 도내 일자리 연계, 생활정착 정보 제공, 유관기관 협력,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성 및 차별화 과제

- 담당자들은 강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정책이 중앙정부 정책과 일부 기능적으로 중첩될 수 있다고 인식함
 - 취업교육, 자격증 과정, 상담 등은 국방부·국가보훈부의 전직지원정책과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강원 정책은 단순한 취업교육이나 자격증 지원이 아니라,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한 생활밀착형 지원과 도내 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정책과 강원 정책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전역 전 준비,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보편적 전직지원, 강원은 도내 정착과 생활기반 연계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강원 간 정보공유, 홍보, 대상자 발굴, 상담 연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향후 강원 정책 방향 및 센터 기능 재설계

- 담당자 심층인터뷰 결과, 현행 조례에 명시된 다양한 지원 근거를 실질적인 예산 사업으로 구현하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으로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함
 - 실무 담당자들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내에 취업, 창업, 귀농·귀촌·귀산촌, 주거 관련 지원의 방향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정책 운영은 교육 훈련과 상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에는 조례상 지원 내용을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음
- 이는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대폭 추가하기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수단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센터 기능 역시 교육·상담 중심의 운영에서 나아가, 정착 전 과정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제대군인의 정착이 취업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센터는 일자리와 주거, 가족생활, 지역 적응 정보를 연계하는 종합적 지원 창구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향후 강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은 조례상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고, 센터는 지역 정착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센터는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는 도내 유관 부서의 정책 자원을 제대군인의 수요에 맞게 종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담당자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및 상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4 | 담당자 심층인터뷰 주요 결과

구분	내용
강원 정착 여부 결정 요인	• (정착 가능 요인) 장기 복무자의 지역 생활권 형성 및 가족 기반이 있을 경우 강원 정착 가능성이 높음 • (이탈 요인)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 부족과 가족의 수도권 선호가 주요 이탈 요인으로 작용 • (구조적 문제) 정착 실패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도내 '수용 기반(일자리·가족 인프라)의 한계'에 기인함
강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센터 역할 인식	• (본질적 역할 공감) 단순 취업 지원을 넘어 일자리·주거·가족을 아우르는 '종합 코디네이터' 방향으로 깊이 공감 • (현재 기능) 교육·상담·정보 제공 중심으로 전직 준비와 정착 초기 단계를 지원 • (행정적 피로도) 한정된 인력·예산으로 단기 교육 및 단순 민원에 치중되어 실질적 기획 역량 발휘에 제약 발생 • (보완 방향) 일자리·주거·가족생활·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플랫폼 기능 강화 필요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성 및 차별화 과제	• (기능 중복 영역) 취업교육, 자격증 과정, 상담 등은 국방부·국가보훈부 정책과 기능적으로 유사하게 인식될 소지 존재 • (강원의 비교우위 1)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한 생활밀착형 지원과 도내 기업 연계·정주 지원에서 차별성 확보 가능 • (강원의 비교우위 2) 도내 우수 기업 직접 매칭 및 지자체 타 부서(주거·농정 등) 결합을 통한 '통합 정주 패키지' 역량 • (협업 과제) 중앙은 전직지원, 강원은 지역 정착 공백 보완 역할을 맡되, 데이터 연계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보완 필요
향후 강원 정책 방향 및 센터 기능 재설계	• (정책 방향) 조례에 명시된 취업·창업·귀농귀촌·귀산촌·주거 관련 지원의 실질적 활성화 필요 • (센터 재설계) 교육·상담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정착 전 과정을 연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기능 보완 • (발전 방향) 도청 내 유관 부서 및 시·군 정책 자원을 연계한 '강원형 통합 정착 패키지' 구축 필요

4. 소결

□ 제대(예정)군인의 강원 정착 인식의 양면성

- 강원 지역에 대한 제대(예정)군인의 정착 의지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의지가 실제 정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한계점이 존재함
 -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제대(예정)군인은 장기간 강원 지역에서 형성된 생활권의 익숙함, 가족의 거주 및 선호, 자연환경 그리고 도로망 확충 등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정착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제대군인 본인의 정착 희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제약요인으로 실제 정착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등 정착 의지가 자동적으로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제대군인이 군에서 축적한 조직 관리 역량과 기대 임금 수준을 온전히 충족해 줄 수 있는 도내 양질의 일자리 부재, 그리고 고연령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대형 의료 인프라의 취약성, 가족생활 여건의 한계 등은 주요 제약 요인으로 확인됨
- 종합하면, 제대(예정)군인은 강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실제 강원 정착 여부 결정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살고 싶은 주관적 의지’와 ‘생존을 위해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딜레마의 과정임
 - 이는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이 단순한 정착 의지 확인에 머물기보다, 실제 정착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함

□ 강원 정착의 핵심 조건

-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제대(예정)군인 개인의 구직 여부를 넘어,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및 체감 정주 여건 확보가 성공적인 강원 정착을 결정짓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대군인 본인의 주관적인 정착 의지나 개인의 직장 확보 여부보다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와 이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가 실제 정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돌봄, 의료 및 생활편의 인프라는 가족 동반 정착의 현실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 인터뷰 참여자들은 강원 내에 경력이 단절된 배우자가 새롭게 진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함
 - 이는 결국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 가족을 남겨두고 제대군인 홀로 도내에 거주하는 '분리 정착(기러기 가족)'을 심각하게 유발하거나 정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작동함
 - 수도권 대비 대형 상업 및 학군 시설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한계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조성한 생활밀착형 문화 시설은 강원 정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됨
- 종합하면, 제대(예정)군인의 강원 정착은 개인 단위 취업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돌봄, 의료·생활 인프라를 함께 고려하는 가족 단위 정주 지원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현행 강원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교육·상담·정보 제공 프로그램은 제대(예정)군인의 전직 준비와 정착 준비에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전직 지원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 특히, 단기 자격증 중심의 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사업과 기능적으로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으며, 실제 도내 기업 직접 채용과 연계되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또한 주거, 가족생활, 생활 인프라와 같은 정착 핵심 요소에 대한 지원은 아직 충분히 결합되지 못해, 정책 목표인 '강원 정착'에 비해 지원수단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강원 지원정책인 상담 및 정보 제공, 취업·창업 교육, 정착 준비 지원 효과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 체감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인 정책 개입 여지와 잠재력이 충분함을 시사함
 - 특히, 인력 및 예산의 제약, 사업 중복성이라는 비판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에서 센터를 실제 이용해 본 제대(예정)군인들은 상담사의 밀착 지원과 헌신적인 정보 제공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

- 결론적으로 현행 강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은 유대감 형성, 전직 준비 지원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화되는 정착 중심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즉, 기존 정책의 강점을 유지하되, 실제 정착과 직결되는 일자리 연계, 주거, 가족생활 지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은 단순한 전직지원이나 교육훈련 제공을 넘어, 실제 지역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제2장에서 도출된 문헌 및 제도적 한계와 제3장의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정책은 취업 상담 및 단기 위탁 교육 위주인 현행 센터의 긍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향후 실질적인 정착 성과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 보완이 필요함
 - 즉, 기존의 상담·교육 기능을 유지하되, 도내 일자리 연계, 생활정착 정보 제공, 주거 및 가족생활 지원, 사후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앙정부의 보편적 전직지원과는 차별화되는 강원형 정책의 핵심은 ‘지역 정착’에 있는 만큼, 향후 강원만의 통합 정착지원체계를 보다 분명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기능이 개인 단위 취업지원에서 나아가 가족 단위로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 정착지원체계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
 -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조례상 지원 근거(창업자금 이차보전 등)를 실제 예산 사업으로 부활시키고, 도청 내 흩어져 있는 유관 부서의 다양한 정책 자원을 제대군인의 복합적인 수요에 맞게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IV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고도화 방안

1.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 개요

□ 비전 및 목표

- 기존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이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 및 복지’ 차원에 머물렀다면,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은 도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및 경제 활성화’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함
 - 제대군인을 강원의 새로운 핵심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 가구의 안정적인 유입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 방향임
-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비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제대군인 정착 생태계 조성
 - 목표: 제대군인과 가족의 성공적인 도내 유입 촉진 및 안정적 장기 정착 지원
 - 추진 전략: 1. 일자리 및 경제활동 기반 강화, 2. 주거 안정 및 초기 정착지원, 3. 가족 동반 정주 환경 조성,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조성, 5. 데이터 기반 정책 및 홍보 체계 강화

□ 추진 전략 및 정책 대안 요약

-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추진 전략 및 14개 세부 정책 대안 제시
 - 추진 전략 1: 일자리 및 경제활동 기반 강화 / 4개 세부 정책 대안
 - 추진 전략 2: 주거 안정 및 초기 정착지원 / 3개 세부 정책 대안
 - 추진 전략 3: 가족 동반 정주 환경 조성 / 3개 세부 정책 대안
 - 추진 전략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조성 / 2개 세부 정책 대안
 - 추진 전략 5: 데이터 기반 정책 및 홍보 체계 강화 / 2개 세부 정책 대안

| 표 4-1 |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 개요

추진 전략	내용 및 정책 대안
비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제대군인 정착 생태계 조성
목표	제대군인과 가족의 성공적인 도내 유입 촉진 및 안정적 장기 정착 지원
추진 전략 1: 일자리 및 경제활동 기반 강화	1. 제대군인 경력 연계형 일자리 매칭
	2. 제대군인 배우자 맞춤형 동반취업 지원
	3. 강원 로컬 비즈니스(귀농·귀촌·귀산촌) 결연 프로젝트
	4. 제대군인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
추진 전략 2: 주거 안정 및 초기 정착지원	1.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제대군인 정착주택 조성
	2.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 기반 징검다리 정착거점 조성
	3. 생활밀착형 초기 정착 서비스 지원
추진 전략 3: 가족 동반 정주 환경 조성	1. 군인가족 맞춤형 돌봄 연계 정착지원
	2. 제대군인 자녀 대상 강원형 진로·성장 지원
	3. 가족 생활밀착형 문화·여가 향유 및 심리 지원
추진 전략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조성	1. 선배 제대군인-전역예정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2. 제대군인 및 가족 대상 지역 커뮤니티 허브 구축
추진 전략 5: 데이터 기반 정책 및 홍보 체계 강화	1. 강원형 제대군인 통합 DB 구축
	2. 전역 전 365일 사전 연계형 강원 정착 플랜

2. 추진 전략 1: 일자리 및 경제활동 기반 강화

□ 정책 대안 1: 제대군인 경력 연계형 일자리 매칭

● 정책목표

- 군 복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특기의 지역 일자리 전환을 통한 제대군인의 안정적 취업 및 도내 정착지원

● 주요 내용

- **도내 기업·공공기관 일자리 수요 분석:** 도내 공공기관, 유관기관, 중견기업 이상 지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채용 수요, 직무, 우대고용 가능 직위 등을 조사·분석하여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 **군 경력-민간 직무 연계 체계 구축:** 제대군인의 군 경력, 주특기, 직무 경험 등을 도내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전환 기준 마련

- **우대고용 제도 연계 매칭:** 안전관리, 시설관리, 재난대응, 운송·장비 운영 등 군 경력 활용 가능 직무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대상 제대군인과 우대고용 수요를 연계하여 맞춤형 매칭 지원
- **맞춤형 경력 전환 설계 및 직무교육:** 제대군인의 직무 역량 진단과 취업 경로 설계를 지원하고, 채용 연계 전 필요한 보수교육·자격 보완·직무 전환 상담 등을 제공하여 실제 채용 연계성 제고

● 기대효과

- 군 경력 사장 방지 및 전문성·우대고용 자격을 활용한 취업 확대로 정착 가능성 제고
- 도내 기업·공공기관의 우대고용 수요와 제대군인 인력의 연계를 통한 노동시장 미스 매치 완화
- 지역 일자리와 숙련 인력의 적기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 정책 대안 2: 제대군인 배우자 맞춤형 동반취업 지원

● 정책목표

- 경력 단절을 겪는 제대군인 배우자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한 가구 단위의 안정적 경제 활동 및 도내 정착지원

● 주요 내용

- **배우자 경력·수요 진단:** 제대군인 배우자의 경력단절 여부, 직무 경험, 희망 근로형태 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 수요 파악
- **지역 일자리 정보 제공 강화:**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협력하여 제대군인 배우자 전담 직업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 **일·가정 양립 가능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시간선택제, 유연근무형, 공공서비스형, 지역 서비스업 등 배우자 적합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매칭 지원
- **취업 준비 지원:** 직무역량 강화, 구직상담, 맞춤형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수요가 높은 분야로의 취업 준비 지원

● 기대효과

- 제대군인 가구의 소득 기반 안정화를 통한 가족 동반 정착 가능성 제고
- 배우자 취업 제약 완화를 통한 분리 거주 및 타 지역 이주 가능성 감소

□ 정책 대안 3: 강원 로컬 비즈니스(귀농·귀촌·귀산촌) 결연 프로젝트

● 정책목표

- 강원 지역 자원(농·산촌)과 연계한 로컬 비즈니스 진입 지원을 통해 농·산촌 인구 유입과 제대군인 가구의 경제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주요 내용

- **지역 맞춤형 결연 체계 구축:** 귀농·귀촌·귀산촌 희망 제대군인과 시·군, 지원기관, 선도 농가·임업인·지역 창업주체 간 결연 체계 마련
- **‘귀산촌’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산림 비중이 높은 강원 특성에 맞춘 임업 경영, 산림 치유, 산림 레포츠 등 ‘귀산촌’ 특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로컬 비즈니스 진입 지원:** 농산물 생산·가공, 산촌자원 활용, 지역관광, 생활서비스 등 강원형 지역자원 기반 사업모델 발굴 및 연계 지원
- **지역 선도농가 결연 및 현장 실습:** 지역 농·임업인과 제대군인(가족)을 매칭(결연)하여, 영농·영림 기술 전수 및 지역 사회 융화 노하우 밀착 지원

● 기대효과

- 제대군인 및 가족의 도내 농·산촌 유입을 통한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의 활력 회복
- 강원 지역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지역기반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강화

□ 정책 대안 4: 제대군인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

● 정책목표

- 제대군인과 가족 중심의 공동체 기반 마을기업 설립·운영 지원을 통해 자생적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주요 내용

- **제대군인 주도형 마을기업 모델 발굴:** 제대군인, 가족, 지역주민 등 5인 이상이 출자하는 협동조합 및 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군부대 연계 서비스, 지역 특산물 가공, 점경지역 안보·생태 관광 등 강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연계:** 법인 설립, 사업계획 수립, 지정요건 충족, 교육·컨설팅 등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매칭 지원

- **지역 상생 및 공공성 연계 도모:** 단순 이윤 창출을 넘어 도내 농·산촌 고령층 대상 생활 서비스 제공, 마을 유희시설(빈집 등) 관리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사회적 가치) 기반의 수익 모델 육성

- 기대효과

- 제대군인과 가족이 주도하는 공동체 창업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자립 기반 확보
- 지역자원 활용과 지역문제 해결을 결합한 강원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3. 추진 전략 2: 주거 안정 및 초기 정착지원

□ 정책 대안 1: 빈집 및 유희시설 활용 제대군인 정착주택 조성

- 정책목표

- 도내 빈집 및 유희시설을 활용한 제대군인 정착주택 조성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장기 정착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빈집 및 유희 공공시설 등 활용 가능 자원 발굴:** 시·군 단위의 빈집, 농어촌 유희시설 실태조사 및 리모델링을 통해 제대군인 및 가족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형 정착주택 조성
- **지역 맞춤형 입지 선정:** 군부대 인근, 생활 인프라 접근 가능 지역, 귀농·귀촌·귀산촌 연계 가능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
- **저비용·장기 임대형 공급 및 운영체계 구축:** 장기적 정착을 목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

- 기대효과

- 제대군인 가구의 초기 주거 불안 완화 및 장기 정착 가능성 제고
- 도내 빈집 및 유희시설의 재활용을 통한 지역 주거자원 활용도 제고 및 정주 여건 개선

□ 정책 대안 2: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 기반 징검다리 정착거점 조성

● 정책목표

- 전역 이후 즉시 이주가 어려운 제대군인 및 가족에게 체류형 정착거점을 제공하여 단계적 도내 정착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 기반 체류거점 조성:** 도내 빈집, 노후주택, 유휴 공공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제대군인 및 가족이 일정 기간(최대 2년) 체류할 수 있는 거점 공간 구축
- **징검다리형 임시 거주 지원:** 전역 직후 1~2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강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직, 귀농·귀촌·귀산촌 준비, 지역 적응을 병행할 수 있는 전환형 주거 지원
- **정착 준비 활동 연계:** 체류 기간 동안 취업상담, 생활정보 제공, 지역 탐색, 귀농·귀촌·귀산촌 교육 및 컨설팅 등과 연계한 통합 지원 운영

● 기대효과

- 제대군인 및 가족의 초기 이주 부담 완화와 단계적 도내 정착 가능성 제고
- 유휴 자원을 활용한 정착거점을 통해 지역 내 체류 인구 확보 및 소비 활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정책 대안 3: 생활밀착형 초기 정착 서비스 지원

● 정책목표

- 교통, 의료, 생활편의, 지역정보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제대군인 가구의 지역사회 정착률 지원

● 주요 내용

- **제대군인 맞춤형 정착 서비스 안내 체계 구축:** 제대군인 및 가족이 전입 초기부터 교통, 의료, 교육, 복지, 생활편의, 행정절차 등 종합 생활정보 안내서와 초기 정착 안내 자료 제공
- **생활밀착형 초기 정착 서비스 연계:** 보건소, 의료기관, 대중교통, 복지시설, 생활SOC 등과 연계하여 초기 정착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 이용 지원

- 지역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군별 생활안내, 지역 탐색, 행정서비스 신청 지원, 정착 상담 등을 통해 전입 초기 적응 지원

- 기대효과

- 낮은 이주 환경에 따른 정보 부족 및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해 제대군인 및 가족의 정주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 향상
- 초기 정착 단계의 행정·생활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성공적 도내 안착 유도

4. 추진 전략 3: 가족 동반 정주 환경 조성

□ 정책 대안 1: 군인가족 맞춤형 돌봄 연계 정착지원

- 정책목표

- 제대군인 가족의 자녀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전환 지원을 통해 가족 단위의 안정적 도내 정착지원

- 주요 내용

- 군인가족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제대군인 가족의 영유아·아동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도내 유희 공간을 제대군인 가족 중심의 공동 돌봄 공간(어린이집, 공동육아, 방과후 돌봄 등)으로 리모델링
- 가족 품앗이 돌봄 네트워크 운영: 제대군인 가족 간 상호 돌봄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역 기반 품앗이 돌봄 네트워크 및 부모 커뮤니티 운영

- 기대효과

- 제대군인 가족의 육아·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가족 동반 정주 가능성 제고
- 돌봄 인프라 확충과 공동육아를 통한 정서적 고립감 해소 및 지역사회 융화 촉진

□ 정책 대안 2: 제대군인 자녀 대상 강원형 진로·성장 지원

- 정책목표

- 잦은 전학과 이주로 인한 제대군인 자녀의 학업 불안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여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한 가족 단위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기반 강화

● 주요 내용

- **지역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대군인 자녀가 강원 지역의 교육·산업·직업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체험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대학 연계 학습·진로 멘토링**: 강원 도내 대학, 공공기관과 제대군인 자녀를 매칭한 연계 멘토링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정착형 성장 지원 강화**: 기존 강원 및 시·군의 장학·교육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연계와 맞춤형 진입 가이드 제공 등 기존 제도 활용을 위한 안내 지원

● 기대효과

- 제대군인 자녀의 지역 적응력과 진로 설계 역량 제고를 통한 가족 동반 정주 가능성 확대
- 교육·진로 불안 완화를 통한 제대군인 가족의 안정적 도내 정착 기반 강화

□ 정책 대안 3: 가족 생활밀착형 문화·여가 향유 및 심리 지원

● 정책목표

- 제대군인 가족의 문화·여가 향유와 심리적 적응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 만족도 및 정주 의지 제고

● 주요 내용

- **가족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연계 및 이용 지원**: 제대군인 가족 단위로 도내 문화·예술 공연, 관광지, 체육시설, 산림 휴양시설 등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여가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
- **자녀·배우자 심리상담 지원**: 잦은 전학, 이주, 생활환경 변화로 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자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연계
- **가족 적응 지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전역 후 급격한 생활 환경 변화 속에서 가족 간 적응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 소통·힐링 캠프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제대군인 가족의 문화·여가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성 제고를 통한 가족 동반 정주 가능성 확대
-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 및 도내 장기 정주 유도

5. 추진 전략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정책 대안 1: 선배 제대군인-전역예정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 정책목표

- 강원 정착 경험을 보유한 선배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자를 연결하여 생활밀착형 정착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여 성공적인 도내 정착 유도

● 주요 내용

- **제대군인 맞춤형 소그룹 구성 및 운영**: 도내 정착 경험이 있는 제대군인을 발굴하여 권역별·경험별 멘토단을 구성하고, 지역 이주를 희망하는 전역예정자와 소그룹 멘토링 연계
- **생활밀착형 정착 노하우 전수**: 공식적인 행정 상담으로는 알기 어려운 지역 현황, 일자리, 생활 인프라, 지역 적응 등 실제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 공유

● 기대효과

- 전역예정자의 정착 불안 완화와 강원 정착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제고
- 공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실질적 조언을 통해 초기 정착 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

□ 정책 대안 2: 제대군인 및 가족 대상 지역 커뮤니티 허브 구축

● 정책목표

- 제대군인과 가족의 지속적인 교류와 지역사회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 자조적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소속감 확립

● 주요 내용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허브 구축**: 제대군인과 가족이 정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휴식하고 소통·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복합 오프라인 공간 및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 **자조적 동아리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가족 모임, 취미·봉사 동아리, 생활정보 공유 모임 등 자발적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역 기여형 참여 프로그램 연계**: 제대군인의 특기와 경험을 활용한 생활 봉사, 재능 기부,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융화 도모

- 기대효과

- 상시적이고 자발적인 커뮤니티 활동 보장으로 정서적 고립감 해소
- 지역사회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통해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 및 긍정적인 제대군인 인식 확산

6. 추진 전략 5: 데이터 기반 정책 및 홍보 체계 강화

□ 정책 대안 1: 강원형 제대군인 통합 DB 구축

- 정책목표

- 강원 맞춤형 제대군인 통합 DB 구축을 통해 대상자 특성과 정착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착지원 체계 마련

- 주요 내용

- **강원형 제대군인 기초 DB 구축**: 제대군인 현황, 정착 희망 여부, 취업 여부 및 유지 현황, 전문 특기, 경력, 가족 동반 여부 등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 정보 구축 및 통합 관리
- **전역 전후 생애주기별 정보 연계망 구축**: 전역 예정 단계(군부대)의 수요 조사부터 전역 후 실제 정착 단계까지의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계 및 이관하여, 단절 없는 정보 흐름과 밀착 관리 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 매칭 및 사후관리**: 축적된 DB를 분석하여 개인별 역량과 수요에 최적화된 일자리·주거·가족 지원 정책을 정밀 매칭하고,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추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 기대효과

- 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정책 매칭을 통해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 대상자 발굴·사후관리 체계화를 통한 정책 누락 최소화 및 활용도 제고

□ 정책 대안 2: 전역 전 365일 사전 연계형 강원 정착 플랜

● 정책목표

- 전역 1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강원 정착의 혜택과 비전을 제시하여 강원을 최우선 정착지로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내용

- **전역 전 조기 안내체계 구축:**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역 1년 전부터 강원 정착지원제도, 특화 일자리, 주거 지원, 가족 지원, 귀농·귀촌·귀산촌 등 핵심 정보를 시기별·단계별로 나누어 제공
- **개인별 맞춤형 ‘강원 정착 로드맵’ 설계:** 전역예정자의 희망 진로와 특성(군경력, 주특기, 가족 유무 등)을 바탕으로 강원 정착하기 위한 맞춤형 로드맵을 사전 설계 및 상담 연계
- **찾아가는 군부대 현장 설명회 정례화:**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도내 주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강원 정착지원 통합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현장에서 예비 수요자를 직접 발굴

● 기대효과

- 전역 직후 정보 공백 최소화과 사전 준비 강화를 통한 안정적 도내 정착 가능성 확대
- 전역 후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력의 사전 차단 및 정책 활용률 제고

V 결론

1. 연구 요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청년층 유출, 산업 인력기반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핵심 인적자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20대 청년층의 구조적 순유출이 지속되는 반면, 40~60대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유입되는 비대칭적 인구이동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제대군인은 군 복무를 통해 축적한 조직 경험과 직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으로 볼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정책대상으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 유입이나 외국인 등 외부 인구 유입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정주 여건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강원에 안정적 정착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제대군인은 강원 장기 거주 의향이 매우 높고, 전체 제대군인의 7.2%가 강원에 거주하여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보이며, 매년 약 600명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큼
- 접경지역과 군부대가 다수 분포한 강원 지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군(軍)과 결부된 지역 정체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인구 유입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인구 유입 전략을 넘어 경제활동 기반 확충의 측면으로 작용함
 - 따라서 제대군인 정책은 기존의 예우와 지원 중심이 아닌, 강원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종합적 정책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인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대군인의 안정적 유입과 장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강원도의 인구·산업 여건, 제대군인 현황,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대군인의 정착 의향, 정착 저해요인, 정책 수요를 분석함

□ 강원 제대군인 지원정책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대군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6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기존 '5년 이상 복무자'에서 '4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되어, 일부 단기 복무자까지 정책대상 범위가 넓어짐
 - 또한 군인가족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 본인뿐 아니라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됨
- 지자체 차원의 전담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및 취·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센터를 설립(2012년 7월) 및 운영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도내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을 발굴하고 밀착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함
 - 센터에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취업·창업, 귀농·귀촌·귀산촌, 도내 정착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제대군인 정착 인식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정착 애로사항과 필요 지원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는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인 제대(예정)군인 및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제대(예정)군인의 강원 정착 의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강원을 정착지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줌
- 반면 정착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본인의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 배우자의 경력 단절, 자녀 교육 및 돌봄 인프라 열악 등 가족 단위 거주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종합하면, 제대군인의 강원 정착은 ‘높은 정착 의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가족생활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정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양면성을 보임
 - 따라서 향후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은 개인 단위 전직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가족생활·지역사회 적응을 결합한 가족 단위 정주 지원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

-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 정착을 기존의 보훈·복지 중심 접근을 넘어, 제대군인과 가족의 안정적 유입과 장기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비전 및 목표 설정과 함께,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함
 - 비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제대군인 정착 생태계 조성’, 목표는 ‘제대군인과 가족의 성공적인 도내 유입 촉진 및 안정적 장기 정착 지원’으로 설정함
 - 추진 전략 1. **일자리 및 경제활동 기반 강화**: 제대군인과 배우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 로컬 경제활동,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지원 등
 - 추진 전략 2. **주거 안정 및 초기 정착지원**: 정착주택 조성, 징검다리 정착거점 마련, 생활 밀착형 초기 정착 서비스 지원 등
 - 추진 전략 3. **가족 동반 정주 환경 조성**: 돌봄, 자녀 진로·성장, 문화·여가 및 심리 지원을 통한 가족 단위 정주 기반 확충 등
 - 추진 전략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조성**: 멘토링 네트워크와 지역 커뮤니티 허브를 통해 정착 이후 관계망과 지역 소속감 강화 등
 - 추진 전략 5. **데이터 기반 정책 및 홍보 체계 강화**: 강원형 제대군인 통합 DB 구축과 전역 전 사전 연계형 정착 플랜을 통한 선제적 정책 접근성 제고 등

2. 제대군인 정착지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제대군인의 전략적 정책대상화와 지원 공백 해소

-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청년층 유입이나 외국인 등 외부 인구 유입정책은 강원도 일자리·정주 여건상 안정적 정착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음
 - 반면 제대군인은 강원 장기 거주 의향이 높고, 전체 제대군인의 7.2%가 강원도에 거주하며, 매년 약 600명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현실적 정책대상으로서 의미가 큼
-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매년 약 600명 수준의 제대군인이 유입되고 있으나, 현행 정착지원 체계가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정책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연간 교육 인원은 약 400명 수준이나, 취업, 창업, 귀농귀촌귀산촌 교육 수료자가 자격증 과정에 다시 참여하는 등 중복 참여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순수 지원 인원은 약 200명 수준으로 파악됨
 - 이는 매년 유입되는 제대군인의 상당수가 지역 차원의 체계적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향후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은 이러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원 범위를 개인 단위 취업지원에서 가족 단위 정주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순 교육·상담 중심의 지원을 넘어 대상자 발굴, 맞춤형 일자리 연계, 주거·가족생활 지원,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정착지원체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제대군인을 강원도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수용하고, 정착지원 정책을 인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기능 및 조직 체계 고도화

□ 단기: 현행 센터 기능 재설계 및 전담팀 신설

-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기능을 재설계하고, 이를 총괄할 전담 행정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센터는 교육·상담, 자격증 과정, 취업정보 제공 등 전직지원 기능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착지원 정책의 기획·조정, 부서 간 연계, 성과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행정지원 중심의 운영방식과 위탁 중심의 사업수행 구조만으로는 정책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 단위 정착지원 등 신규 정책 기능을 추진하기 어려움
- 현행 센터 체계를 유지하되, 정책기획·행정지원·자원연계 기능과 상담·사업수행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책 설계, 예산사업 발굴, 유관 부서 협업, 시·군 연계, 성과관리 등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위탁기관 및 상담 인력은 1:1 맞춤형 상담, 교육 운영, 정착지원 프로그램 수행, 사후관리 등 수요자 접점 기능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행정은 정책기획과 연계 조정을 담당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는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제대군인 정착지원 업무를 안정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급 중심의 별도의 전담팀 신설이 필요함
 - 정책기획과 가족 단위 정착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급을 둔 전담팀을 신설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력의 증원이 필요함
 - 조례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과 군인가족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강화된 만큼, 이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한 인력 증원 등 추진체계 보강이 요구됨
- 또한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정책 추진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정식 직제 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센터는 조례상 설치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행정조직 내 정식 직제로 충분히 편입되지 못할 경우 공문 발송, 기관 간 협약, 예산 집행, 인력관리 등에서 운영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센터를 행정기구 체계 내에서 보다 명확한 공식 조직으로 정비하여, 대외 협력과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 기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상담 분야의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중심에서 직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방식은 단기 사업 운영에는 유연성이 있으나, 상담 인력의 업무 연속성, 수요자 관리, 사후관리, 기관 간 협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교육·상담 기능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담 인력의 안정적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센터 직영 기반의 교육·상담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센터는 기존의 교육·상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일자리·주거·가족지원·지역 사회 적응을 연계하는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총괄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연계형 조직 개편

- 제대군인 정책을 기존의 보훈 관점에서 ‘인구·경제 활성화’ 관점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등 지역경제·고용지원 전문기관과 결합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핵심은 단순한 예우나 전직교육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업, 로컬 비즈니스, 배우자 취업, 지역경제 참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따라서 경제·고용·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진흥원과 센터 기능을 결합할 경우, 도내 기업 네트워크, 일자리 정보, 창업지원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진흥원 산하 전담센터 또는 전담조직으로 이관·재편할 경우, 제대군인 정착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음

- 다만 조직 개편의 판단 기준은 센터의 존속 여부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가족이 실제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두어야 함
 - 제대군인 입장에서는 지원조직이 도청 소속인지, 경제진흥원 산하인지보다 일자리·주거·가족지원·지역사회 적응 서비스를 얼마나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함
 - 따라서 중·장기 조직개편은 행정조직의 편의가 아니라 정책 수요자의 체감효과와 정착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경제진흥원 산하 전담조직화는 일자리·창업·기업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장점이 있으나, 정착지원 기능이 경제활동 지원으로만 축소되지 않도록 보완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대군인 정착은 취업만으로 완결되지 않으며, 배우자 일자리, 자녀 교육·돌봄, 주거, 의료·생활 인프라 등 가족 단위 정주 여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업·기업연계 기능을 강화하되, 도청 내 복지·여성가족·농정·주거·인구정책 부서 및 시·군과 연계하는 플랫폼형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지원과 생활정착 지원을 함께 연결하는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전문조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협력형: 중앙-강원 제대군인 통합지원 거점 구축

-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시너지를 높이고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공간적 통합 및 기능 분담을 추진함
 - 두 기관은 설치 근거와 예산, 지휘 체계가 달라 조직적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직은 분리하되 동일 공간에 양 기관을 유치하여 제대군인이 한 곳에서 중앙과 지역의 지원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을 마련함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직지원금, 전국 단위 취업상담,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 보편적 전직 지원을, 강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도내 주거·가족 지원, 강원 특화 일자리, 귀농·귀촌·귀산촌 안내 등 지역 정착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함
- 이를 통해 수요자인 제대군인은 기관 구분 없이 전직과 정착에 필요한 모든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3) 거버넌스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 강원 내 자원 연계형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

-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은 일자리, 주거, 보육, 문화 등 복합적인 분야를 포괄하므로, 단일 부서 사업이 아닌 범부서·범기관 협력 체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청 내 일자리·주거·농정·산림·복지·여성가족·문화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수요자 접점과 정책 연계 기능을 담당하고 각 부서·기관이 분야별 정책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함
- 이를 통해 강원형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은 개별 사업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제대군인과 가족의 실제 정착 과정에 맞춘 통합적 지원체제로 운영될 수 있음
 -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수요자 접점과 정책 연계 기능을 담당하고, 도청 유관 부서와 시·군은 각 분야별 정책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일자리, 주거, 가족생활, 지역 적응을 포괄하는 강원형 통합 정착지원 패키지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음

□ 중앙정부-강원특별자치도-시·군 간 협력체계 강화

-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전역 전 준비와 전직역량 형성을 담당하고,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보편적 전직 지원과 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함
 -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지원 이후의 지역 정착과 생활기반 연계를 담당함으로써, 중앙정부 지원체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정착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간 대상자 정보 연계, 프로그램 홍보, 상담 연계, 교육과정 조정, 취업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역예정 단계에서부터 강원 정착 희망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전역 후에는 강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간 상담·교육·취업정보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전역 전 준비, 전역 직후 전직지원, 도내 정착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단계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시·군은 실제 정착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단위의 지원 주체로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는 대상자 발굴, 통합 DB 구축, 도내 기업·기관 연계, 정책기획 및 성과 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시·군은 주거, 생활정보, 지역 커뮤니티, 귀농·귀촌·귀산촌, 가족 정주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의 역할분담이 필요함
 - 특히 접경지역과 군부대 소재 시·군은 제대군인 정착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 만큼, 도·시·군-센터 간 협력체계를 통해 제대군인의 지역별 분산 정착과 지역경제 연계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례 기반 지원사업 예산화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 강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상 마련된 지원 근거를 실제 예산사업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조례상에는 창업자금 지원, 농가주택 구입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예산 제약으로 교육·상담 위주에 국한되어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신설하기보다, 기 마련된 조례상의 주거·창업·귀농·귀촌·귀산촌 관련 지원 근거를 장기적 관점에서 실제 재정 지원 사업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착 성과 중심으로 성과관리 지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성과지표는 교육 참여자 수, 자격증 취득자 수 등 투입·활동 중심 지표를 넘어, 도내 정착률, 취업 유지율, 가족 동반 정착률, 가구 단위 환산 정착 규모, 사후관리율 등 정착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강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이 단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국내 및 해외 문헌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2025).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2026).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소개.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2026).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 현황.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2026).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 계획표 안내.
- 국가보훈부. (2025). 제대군인 지원 안내서.
- 국방부. (2025). 전역간부 안내서.
-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 (2025). 2025년도 전직교육안내서.
- 김민혁·김수환. (2024).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삶의 질 실태 분석연구: 육군 전역간부를 대상으로」. 한국국방경영 분석학회지, 50(2), 76-92.
- 김상일 외. (2015).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변수가 취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89-114.
- 김점석·박효선. (2016). 「중·장기 제대군인 재취업 취약계층의 전직역량개발 요구분석」. Crisisonomy, 12(11), 99-114.
- 남응우. (2015).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혜란. (2009).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개선방향」. 한국보훈논총, 8(2), 167-201.
- 박효선. (2022).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확산방안」. 한국보훈논총, 21(4), 157-184.
- 양안나·정철영. (201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전환과정 연구」. 진로교육연구, 24(2), 1-24.
- 양혜원·유근환. (2023). 「제대군인의 복지향상 방안 연구: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4(3), 5659-5670.
- 이현주. (2025).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자료에 기반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 특성」. 한국보훈논총, 24(2), 103-126.
- 정길호 외. (201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적정 취업직위 확보목표 선정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정철영 외. (202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4(2), 51-81.
- 홍선이 외. (2009). 「제대군인 지원정책 국제 비교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법령 및 관련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782호,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783호,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3273호, 20230611)
- 「군인사법」(법률 제21319호, 2026020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5호, 2024011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웹사이트 및 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https://state.gwd.go.kr/portal>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armyjob.kr/gwarmy>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지원센터. <https://gangwoninvest.gwd.go.kr/gwcia>
- 국가보훈부. <https://www.mpva.go.kr/>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s://www.vnet.go.kr/VnetIndex.do>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국방부. <https://www.mnd.go.kr/>
- 강원특별자치도 보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GRDP 역대 최대 64조 6천억 원 달성... 미래산업과 SOC 투자로 100조 시대 가속'. 2025.2.2.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대군인 정착지원 고도화 방안

발간종류 정책이슈리포트

발 행 일 2026년 5월 1일

저 자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페이지 <http://www.krila.re.kr>